

C2006-20 / 2006.10

농업구조조정과 시장개방의 관계 분석

김 정 호 선임연구위원
김 배 성 부 연구 위 원
김 태 훈 전 문 연 구 원
이 용 호 연 구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연구자	담당분야
김정호 선임연구위원	분석결과 해석, 정책 제언
김배성 부연구위원	주요지표 전망 분석
김태훈 전문연구위원	외국사례 검토
이용호 연구위원	농가구조 분석, 제표 정리

머 리 말

이 연구보고서는 농림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농업구조조정과 시장 개방의 관계 분석” 연구의 최종 연구결과이다. 최근 농정의 최대 이슈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며, 앞으로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에 시장개방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즉 농업 구조의 변화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경험이지만, 우리나라는 일찍이 산업화가 진행된 구미 선진국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구조 전환을 경험하였다.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다른 직업으로 전직이 어려운 고령자가 농업 부문에 누적되어 경쟁력이 취약한 생산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 농업은 개방농정 체제로 전환하여 시장지향적인 제도 개혁과 재정 투입자를 겸비한 구조개선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성과를 조금씩 쌓아 나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비효율적인 분야를 줄이는 대신에 효율적인 분야는 강화하면서 총체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농업구조조정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시장개방 진전에 따라 농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주요지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농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하였다.

짧은 기간에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 보고서가 관련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2006.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요 약

□ 농업구조조정의 의미

- “농업구조”(agricultural structure)란 생산물의 구성과 생산요소의 결합 상태를 말함. 특히 단기적으로 변동하지 않는 고정적 생산요소, 그 중에서도 토지와 노동력의 결합 관계가 중요함.
- “구조조정”(restructuring 또는 structural adjustment)이란 산업 또는 기업의 사업구조나 조직구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의미함. 즉, 비효율적인 분야를 줄이는 대신에 효율적인 분야는 강화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조치임.

□ 외국의 농업구조조정 경험

- 선진국들은 100년 이상의 산업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농업 생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고용구조가 변화했으나, 후발국들은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생산 비중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농업 부문에 과잉 취업이 초래되었음.
- 유럽 각국은 1960년대 들어 자립경영 육성정책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독일은 1970년대에 선별적 농가육성에 기초한 강력한 농업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대농 중심의 규모화에 성공한 사례로 알려짐.
- 최근 WTO 출범과 FTA 확산 등으로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농업구조조정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산업적 효율성 이외에 식량안보, 농촌사회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여 농업의 절대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함.

□ 우리나라 농업구조 변화의 동향

- 농업GDP 비중은 빠르게 감소('70~'05년간 연평균 6.0%)하는 반면

농업취업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감소('70~'05년간 연평균 5.2%) 함으로써 농업 부문에 취업자 과잉 현상이 나타나게 됨.

- 후계인력 부족으로 고령농업인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농업경영체로 간주하기 어려운 영세고령농가가 잔류하고 있으며, 이들은 농지보유의향이 강하고 은퇴시까지 자급적 영농을 지속하려는 경향임.
- 농가호수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경지면적 감소는 상대적으로 완만하여 호당 경지규모 확대가 진전됨. 1990년대 이후 대규모 농가로의 농지 집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시설원예와 축산 등은 대농의 생산 집중이 현저함.
- 농업생산구조는 1970년대 중반을 경계로 시장지향적으로 전환되어 식량작물 생산이 정체 내지 감소하는 반면에 과일, 채소, 축산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이들 성장작목이라 불리는 과일과 축산의 생산 증가가 다소 정체되는 추세임.

□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구조 변화 전망

- 시장개방 진전에 따라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업취업자의 감소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음. 농가호수 감소 속도는 UR로 인해 0.49% 포인트 가속화되었으며, 향후 한미FTA 체결시는 기준전망보다 0.23% 포인트 정도 더 빨라질 것으로 분석됨.
- 경지면적과 총재배면적은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이 덜 나타나고 있으며, UR 효과는 0.22% 포인트 정도로 분석됨. 특히 2005년 이후 전망에서 기준전망에 비해 한미FTA 체결시 벼 재배면적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면서 총경지면적 감소가 적은 것으로 추정됨.
- 농업총소득이나 농가소득은 시장개방에 따라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UR에 따른 농업총소득의 영향은 1.90% 정도로 예측되며, 2005~2015년간 농업총소득은 한미FTA 체결시에 기준전망에 비해 연평균 1.47% 포인트 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농업생산액은 시장개방에 따라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농업생산액은 1985~95년간 연평균 8.08%씩 성장했으나, 1995~05년간은 연평균 2.96%로 하락했으며, 앞으로 2005~15년간은 마이너스 0.59%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됨. 또한 한미FTA 체결시는 0.72%포인트 감소한 연평균 마이너스 1.31%로 전망됨.
- 농가 구조의 전망을 영농형태별로 보면, 논벼·채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화훼·특용작물·축산 등은 청장년 경영주 비중이 높음. 전체적으로 50대 이하 청장년 경영주 비중은 2005년 39.6%에서 2015년 28.7%로 감소하는 반면, 70대 이상 고령자는 24.3%에서 34.6%로 증가할 전망이다.
- 경영규모별로 보면, 전업농 중심의 생산구조가 강화되어 2015년에는 10~15% 대농이 전체생산의 50% 이상을 점유할 전망이다. 경종농업은 규모화 속도가 더디지만 대농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영세농은 자급적 영농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축산은 기업적경영이 진전되어 대농 비중이 더욱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농업구조정책의 과제

- 정부는 중장기적인 농업구조의 바람직한 모습을 상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경쟁제도와 지원시책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함. 농산물 가격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구조정책을 통해 경쟁력 있는 경영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시장개방에 따른 소득 감소는 영세농보다는 전업농에게 훨씬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총소득 증대를 위한 경영규모 확대를 장려하면서 소득보험 등을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해야 함.
- 농업경영의 은퇴제도를 확립해야 함. 농업인연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실정에서는 자연스런 은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준에서 고령농업인이 유연하게 경영이양할 수 있도록 은퇴직불과 같은 사회보장대책을 강구해야 함.

Abstract

An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Market Opening and Structural Reform in Agriculture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 between market opening and structural adjustment in agriculture. It i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s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URAA)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his study also analyzed several expected impacts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as well as Free Trade Agreements (FTA).

The meaning of agricultural restructuring

"Agricultural Structure" means combinations of inputs as well as agricultural products. In particular, a very important structural combination is one that combines land and labor, the production elements that are fixed in the short run. "Restructuring" or "Structural Adjustment" means the renovation of an industry or a corporation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its structure. In other words, "restructuring" improves competitiveness by downsizing inefficient parts and expanding efficient parts.

The trend of structural change in Korean agriculture

While the share of Korean agriculture in total GDP has sharply declined at an annual average of 6.0% from 1970 to 2005, the number of farm employees has dropped at a relatively slower pace of 5.2% on average during the same period. Therefore, there are more than enough farmers.

The share of aged farmers has been increasing due to the shortage of succeeding farmers. However, it is hard to classify them as farmers. Nonetheless, they have a keen desire to possess farmland. While the number of farm households decreased rapidly, the total area of arable land dropped slowly. As a result, the farmland per household has increased. Since 1990, the arable land has been concentrated on large-scale farms. The proportion of large scale farms has increased greatly in livestock and greenhouse horticulture.

In the mid 1970s, the structure of agricultural production became market-oriented. While the share of grain production remained steady, the production share of vegetables, fruits, and livestock increased.

The outlook for structural change in agriculture by market opening

The URAA has reinforced the decreasing rate of farm households by 0.49%. The ongoing FTA between Korea and the U.S. is expected to accelerate the decreasing rate by 0.23%. The impact of market liberalization on farmlands is relatively small.

However, the agricultural GDP and farm household income are considerably affected by market liberalization. The agricultural GDP is expected to drop by 1.90% due to URAA and decrease at an annual average of 1.47% by the FTA between Korea and the U.S. during 2005~2015. The agricultural revenue during 1985~1995 increased at an annual average of 8.08%, but dropped an annual average of 2.96% from 1995 to 2005. It is predicted to be dropped by 0.59% from 2005 to 2015, and by 0.72% if the FTA between Korea and the U.S. is concluded.

In terms of the change in agricultural labor force by age, the share of farm operators under 50 years of age is expected to be decreased from 39.6% in 2005 to 28.7% in 2015. The share of older

farm operators over 70 years of age is expected to increase from 24.3% to 34.6% during the same period.

In the future, agricultural production will increasingly depend on large-scale farms. The share of large-scale farms in the grains sector will increase rapidly and cooperate management in the livestock sector will be expanded.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 policy in agricultural structu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raw up a desirable picture of the agricultural structure with mid- and long-term perspectives, and simultaneously implement policies for restructuring the agricultural structure to secure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Since a decrease in the earnings of low income farmers by market liberalization is larger than that of full-time farmers, the government should not only promote the expansion of farm size but also support managerial stability through income insurance.

The government has to introduce a retirement system in farming. Since it is virtually impossible for elderly farm operators to retire at ease without farmer's pension,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social security schemes like direct retirement payment for farmers.

Researcher: Jeong-Ho Kim, Bae-Sung Kim, Tae-Hoon Kim, Yong-Ho Lee
e-mail Address: jhkim@krei.re.kr

목 차

요 약	i
Abstract	iv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농업구조조정 개념과 의의	
1. 농업구조와 구조조정 개념	6
2. 경제 발전과 농업구조 문제	8
3. 외국의 농업구조조정 경험	12
제3장 산업화와 농업구조의 동향	
1. 산업구조조정의 경과	19
2. 농업구조의 변화 동향	21
제4장 시장개방에 의한 농업구조의 변화와 전망	
1. 분석 방법과 시나리오 설정	27
2. 주요지표의 전망과 시장개방 효과 분석	30
3. 농가구조의 변화와 전망	39

제5장 농업구조정책의 과제

- 1. 농업구조정책의 체계화 55
- 2. 농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전략 58

참고문헌 60

부록1. 농업구조 주요지표 전망 61

부록2. 경영주 연령별 농가수 전망 68

부록3. 영농규모별 생산비중 전망 73

부록4. 일본 농업의 FTA 영향 예측(번역자료) 77

표 목 차

제 2 장

표 2-1. 세계 농업과 농정의 흐름	10
----------------------------	----

제 3 장

표 3-1. 국가별 농업취업자 비중 추이	21
표 3-2. 경영주 연령별 농가 수의 추이	22
표 3-3. 농가 및 경지면적의 연평균 변화율 추이	23
표 3-4. 경지규모별 농가계층분화 동향	24
표 3-5. 대농의 농가 비중 및 생산 비중 추이	24
표 3-6. 영세농의 경영체 성격(2004년)	25
표 3-7. 농업생산액의 품목류별 추이	26

제 4 장

표 4-1.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의 연평균 변화율	31
표 4-2. 경지면적, 총채배면적, 쌀면적, 쌀제외면적의 연평균 변화율	33
표 4-3. 농업총소득, 농가소득의 연평균 변화율	35
표 4-4. 농업생산액의 연평균 변화율	36
표 4-5. 경영주 연령별·영농형태별 농가 수 전망	41
표 4-6. 주작목별 대농경영 농가 수 전망	49

그림 목 차

제 2 장

그림 2-1. 국가별 농업GDP 비중 추이	9
-------------------------------	---

제 3 장

그림 3-1. 농업취업자의 연령구조곡선	21
그림 3-2. 농가인구 연령별 구성 변화	22
그림 3-3. 농가 수 및 경지면적의 추이	23
그림 3-4. 경종작물의 생산 추이	26

제 4 장

그림 4-1.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의 변화 전망	31
그림 4-2. 경지면적, 총채배면적, 쌀면적, 쌀제외면적의 변화 전망	33
그림 4-3. 농업총소득, 농가소득의 변화 전망	35
그림 4-4. 농업생산액의 변화 전망	37
그림 4-5. 경영주 연령별 · 영농형태별 농가 수 전망	41
그림 4-6. 경영주 연령별 논벼농가 수 전망	42
그림 4-7. 경영주 연령별 과수농가 수 전망	43
그림 4-8. 경영주 연령별 특용작물농가 수 전망	44
그림 4-9. 경영주 연령별 채소농가 수 전망	44
그림 4-10. 경영주 연령별 화훼농가 수 전망	45
그림 4-11. 경영주 연령별 전작농가 수 전망	46
그림 4-12. 경영주 연령별 축산농가 수 전망	47
그림 4-13. 경영주 연령별 기타농가 수 전망	47
그림 4-14. 논농가 수 및 면적비율 전망	49
그림 4-15. 밭농가 수 및 면적비율 전망	50

그림 4-16. 과수 농가 수 및 면적비율 전망	51
그림 4-17. 시설원예 농가 수 및 면적비율 전망	52
그림 4-18. 한우 농가 수 및 두수비율 전망	52
그림 4-19. 낙농 농가 수 및 두수비율 전망	53
그림 4-20. 양돈 농가 수 및 두수비율 전망	54
그림 4-21. 양계 농가 수 및 두수비율 전망	54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전통적으로 영세농 구조인 우리나라 농업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의 산업적 효율성 추구하고 동시에 사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자립경영의 실현을 위한 구조개혁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으며, 이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농업구조정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 농업구조조정은 농업의 총체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생산요소, 경영주체, 생산 품목 등을 재편하는 것을 말하며, 산업화 초기에는 농공간의 소득격차 해소가 주된 목적이었으나 시장개방이 진전되면서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목적이 추가됨.
- 1990년대 들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인하여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농업은 농가호수 감소, 농업고용 감소 그리고 고령화 등과 같은 급격한 농업구조 변화를 겪고 있으나, 이러한 농업구조 변화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농산물 시장개방의 영향인지에 관한 연구가 미흡함.

- 시장개방과 관련된 농업구조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여러 가정들과 시나리오 하에서 사전과급영향(Ex-ante impacts)을 분석하거나 WTO 출범 이후의 농업구조 변화를 단순히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UR 협상과 WTO 체제가 우리나라 농업구조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 앞으로 진행될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시장개방과 농업구조조정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시장개방이 없었더라면 농업구조조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는지, 농업구조 전환은 시장개방 때문인지 아니면 자연적 구조조정의 결과인지, 시장개방이 농업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얼마나 가속화시켰는지 등을 해명할 필요가 있음.

2. 선행연구 검토

- 우리나라에서 농업구조 문제에 연구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연구가 크게 증가한 것은 1980년대 들어서임. 그간의 연구 동향을 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현상분석적 연구보다는 정책론적 연구이며, 분석의 주안점도 정책적인 시의성이 강한 농지제도 개선이나 농업인력 정책에 중점이 두어졌음.
- 1970년대 말까지 농업구조 문제는 영세농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협업농이나 기업농이나 하는 이념론적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농업구조 변화의 실태나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는 빈약함.
- 1980년대는 농업구조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며, 대표적인 분석 시각은 생산력 구조론적 접근과 농민층 분

해론적 접근으로 대별됨.

- 생산력 구조론적 접근은 토지와 노동력 등 생산요소 보유와 그에 따른 생산력 격차에 의하여 농업구조가 변동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며, 이러한 시각에서 농업구조를 분석한 실증적인 연구로는 박진도(1987), 차홍균(1987), 박홍진(1988) 등을 들 수 있음.
 - 농민층 분해론적 접근은 경지규모 계층별 분화분기점을 근거로 계층간 변동을 파악하려는 것이며, 실증연구로는 이정환(1983, 1986), 김성호(1989), 이영기(1992) 등이 있음. 김성호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1970년대에 중농표준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정환(1983)은 1970년대 중소농의 상대적인 증가와 대농의 상대적인 감소 현상에 대하여 고찰함. 특히 농가계층 변동을 연구한 최근의 논문들은 1980년대 말부터 농민층분해의 형태가 중농표준화형에서 양극분화형으로 바뀌고 있음을 지적함.
- 1990년대 들어 농업구조 변화의 미시적인 연구로서 농가의 경영체적 성격이나 가족구조에 대하여 실증 분석이 시도됨. 김성호 외(1992)는 농업총조사를 이용하여 농가의 가족구성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김정호(1990)와 정기환(1993)은 농가의 성격을 재조명하였고, 오내원 외(1998)는 마을 사례조사를 통하여 농가와 촌락구조 변화를 분석함.
- 그러나 농업경영의 조직론이나 형태론적 접근은 농업구조 변화의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연구되지 못했음. 최근 들어 상업농진전으로 영농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거시적인 동향 파악에 머무르거나 구조 변화의 전체상을 파악하는데 미흡함.
 -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대농과 소농 계층이 증가하는 이른바 농가구조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그 배경으로 WTO 체제와 농산물 시장개방 등의 여건 변화가 지적되었으나, 구체적인 실증 분석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함.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연구 내용

- 농업구조와 구조조정의 개념
 - 농업구조의 개념, 의의
 - 산업구조조정의 개념, 의의

- 경제발전과 농업구조조정의 관계
 - 선진국의 농업구조조정 사례 분석
 -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과 농업구조조정 실태
 - 경제성장과 도농간 성장격차 등 경제발전론적 시각

- 시장개방과 농업구조조정의 관계에 대한 계량분석
 - WTO 체제 이전의 농업구조 지표 분석
 - UR 타결로 인한 시장개방이 농업구조조정에 미치는 사후 파급영향 (Ex-post impacts) 계측
 - DDA와 FTA 타결에 따른 시장개방이 농업구조조정에 미치는 사전 파급영향 계측

- 농업구조조정의 방향과 정책과제 제안
 - 농업구조 변화의 전망
 - 농업구조조정과 정부의 역할
 - 단기 및 중장기 정책과제

3.2. 연구 방법

- 문헌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

- 선행연구 검토
- 산업화와 농업구조 변화의 지표 분석
- 외국의 농업구조조정 사례조사

- KREI-ASMO(농업부문 계량모형)를 이용한 시장개방 영향분석
 - UR 타결 이전의 농업구조 주요지표의 추세
 - WTO 출범 이후 농업구조 주요지표의 변화 전망
 - DDA와 FTA 시나리오에 의한 농업구조의 영향 계측

- 전문가 의견 수렴
 - 농업구조조정 방향, 미래 비전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정책담당자와 검토회의 개최
 - 농업구조정책 추진방안에 관한 검토

제 2 장

농업구조조정의 개념과 의의

1. 농업구조와 구조조정의 개념

□ “농업구조”란 생산물의 구성과 생산요소의 결합 상태를 말함

- 우리나라에서 농업구조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농업 근대화를 위한 시책을 정비하면서부터임.
 - 1962년 6월 29일 각의는 농업 근대화를 위한 생산, 유통, 농촌사회, 농촌생활, 문화 등의 연구를 위하여 당시 농림부 내에 「농업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 의결하고 7월 4일 「농업구조정책심의회 규정」(각령 제861호)을 공포하였음. 이 위원회는 동년 12월에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서 ‘농업구조개선책’을 발표함.
- “농업구조”(farm structure 또는 agricultural structure)에 대해서는 농업경제학 교과서에서도 잘 설명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며,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한국농업경제학회 심포지움(1984.7)에서도 농업구조의 개념에 관한 논란이 있었음.

- 농업구조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구조에 대한 광의의 개념은 농산물의 생산·유통·최종소비에 이르는 농업의 산업적 구조 나아가 농업과 타산업과의 관련성까지 포함. 협의의 개념은 농업생산요소 가운데 단기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 요소, 특히 농업노동력과 토지의 결합 비율이나 분포 상태를 말함.(賴平編, 『農業政策の基礎理論』, 1987)
 - ※농업구조의 4가지 측면: 기업형태별 구조, 경영규모별 구조, 소득 규모별 구조, 부문조직별 구조
 - 농업구조는 농업의 상품 구성과 생산주체 구성을 지칭하는 개념이며, 구조변화는 생산되는 상품과 생산주체의 성격과 구성이 변화하는 것을 말함(이정환, 『농업의 구조전환』, 1997).
 - 농업구조 개선이란 기존의 농업경영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확립하는 것(김정호, “농업구조의 쟁점과 진로”, 『한국농업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 “구조조정”이란 산업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재편하는 것

- “구조조정”(restructuring 또는 structural adjustment)이란 산업 또는 기업의 사업구조나 조직구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의미함. 즉, 비효율적인 분야를 줄이는 대신에 효율적인 분야는 강화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조치이나 대체로 감량(down-sizing)하는 경향이 있음.
 - 소극적 의미: 성장성이 낮거나 비효율적인 분야·조직의 축소 내지 폐쇄, 중복 사업의 통폐합 등으로 규모를 줄이는 것
 - 적극적 의미: 새로운 기술 개발, 경쟁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개편하는 것
- “산업구조조정”이란 경쟁력을 상실한 비교열위 업종은 점차 도태되

고 고부가가치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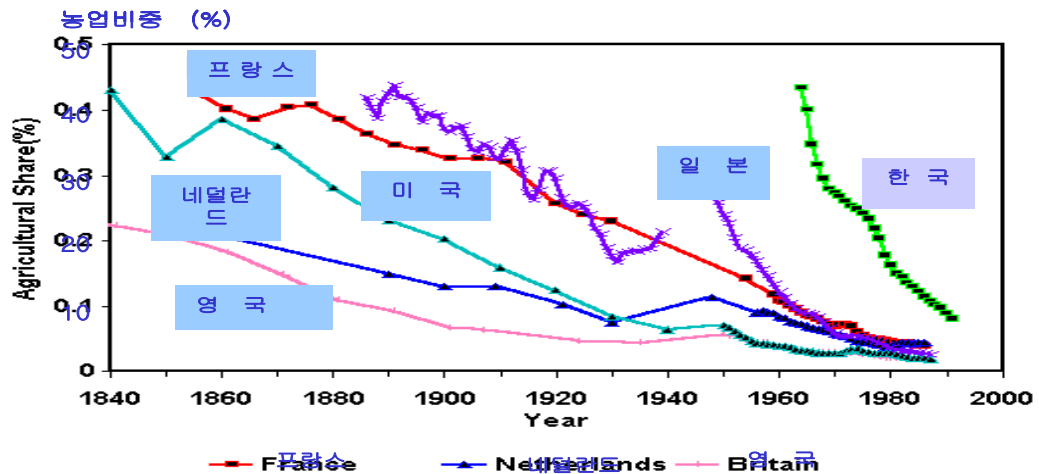
- 산업구조조정이란 한 나라의 산업 중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한 비교열위 업종은 점차 도태되고 고부가가치산업의 비중은 높아지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는 과정을 말함. 한 나라의 산업은 경제발전 단계, 임금 수준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이 나타나게 마련임. 이런 비교열위 업종은 사라지고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말함(NAVER 용어사전).
- 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1960년대 산업화 초기에는 국내적인 생산성 격차 해소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1990년대 이후 시장개방이 진전되면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이 강조됨.
- 반면, 산업구조조정에서 강조되는 효율성 이외에 농업은 식량안보, 농촌사회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이 고려되어야 하며, 따라서 농업생산의 절대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함.

2. 경제 발전과 농업구조 문제

□ 농업구조 변화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

-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지연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에 관계없이 산업의 생산구조와 고용구조는 공통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유럽 선진국들은 100년 이상의 산업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농업생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고용구조가 변하였으나, 후발국들은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생산 비중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농업 부문에 과잉 취업을 초래하는 경향임.

그림 2-1. 국가별 농업GDP 비중 추이



- 농업구조 문제는 생산과 고용의 불균형에 따른 농업 부문의 상대적인 저생산성에 기인함.
 - 생산구조 조정과 고용구조 조정이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면 농업과 비농업간의 생산성 격차는 발생하지 않으나, 이들 구조조정의 시차가 생산성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산업화 초기에는 비농업 부문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문간 생산성 격차를 확대시키고, 따라서 농공간의 소득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산업화 후반기에는 농업취업자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에 기술진보 등에 힘입어 농업의 생산성이 향상됨으로써 농업구조 개선을 도모함.

□ 농업의 지속성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 대두

- 유럽 각국에서 추진된 농업구조 정책은 1980년대 들어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됨.
 - 첫째, 강력한 농업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농업의 생산성 증대는 부진하였음. 더욱이 기대한 만큼 대농경영이 육성되지 못하고, 농지유동화를 통한 경영규모 확대에도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함.

- 둘째, 이농 장려로 인하여 농업 인구가 급속히 감소됨에 따라 농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자연이나 경관의 보전을 중시하는 국토 관리의 측면에서 농업구조 정책에 대한 회의가 표출됨.
- 셋째, 효율성 위주의 농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농업 생산이 전문화와 단작화 및 대규모 경영을 통한 집약적 영농의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생태계 순환 체계의 붕괴 및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점차 심각한 문제로 등장함.
- 넷째, 구조 정책에 의한 각종 시책에도 불구하고 영세소농의 소득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가격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됨. 더욱이 과잉 생산에 대응한 생산 규제가 불가피하게 되면서 전업농의 소득도 위협받게 되는 사태에 직면함.

표 2-1. 세계 농업과 농정의 흐름

시기 및 특징	주요 정책 내용, 성과
1960~70년 생산·가격정책에서 구조정책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혁명과 가격지지를 바탕으로 식량증산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산을 통한 소득문제 해결에는 근본적 한계 노출 ○ 1960년대를 전후로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농공간 소득균형을 동시에 추구
1980~90년 효율성 위주의 농업 한계와 지역정책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지지와 수출보조 등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공급과잉은 UR 협상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 - 생태계 순환체계의 붕괴, 환경오염 문제 노출 ○ 1980년대 초부터 조건불리지역 농업 유지에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자원 및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
1990~2000년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 식품안전성, 농촌경관 등에 관심 증대 -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 ○ 보호 농정에서 시장지향적 농정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문제는 직접지불제로 접근

- 경제 발전에 대한 농업의 역할에 관하여 쿠즈네츠(Simon Kuznets)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지적함.
 - 첫째, 한 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비농업 부문의 성장은 농업 부문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토대로 이루어짐. 농업 부문은 식량의 공급뿐만 아니라 섬유류나 잎담배 등과 같이 제조업 원료를 생산하여 비농업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둘째, 많은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개발 초기의 경제 성장은 농촌 시장의 규모와 상황에 크게 의존하여 왔음. 농민들은 의식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재는 물론 비료, 농약, 농기구 등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비농업 부문의 성장과 자본 축적에 이바지함.
 - 셋째, 농업 부문은 자본이나 노동 등 여러 가지 생산 요소를 공급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음. 많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생산 자원을 생산성이 낮은 농촌(농업)으로부터 도시(비농업)로 이동시켜 그 자원의 효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시켰음.
 - 넷째, 농업 부문은 국제 수지의 균형과 안정에 이바지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농산물의 수출이나 수입 대체를 위한 농업 생산의 증대는 외화 획득에 이바지하고 국제 수지의 개선을 가져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임.

- 최근 WTO 출범과 FTA 확산 등으로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농업구조조정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산업적 효율성 이외에 식량안보, 농촌사회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여 농업의 절대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함.
 - 1984년 UN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에서 “미래 인류의 수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하지 않고 현재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즉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장함.
 - 미국의 1985년 농업법에서 처음으로 지속적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에 관한 조항이 삽입됨.

3. 외국의 농업구조조정 경험

□ 독일

- 유럽 각국은 1960년대 들어 자립경영 육성정책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독일은 1970년대에 선별적 농가육성에 기초한 강력한 농업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대농 중심의 규모화에 성공한 사례로 알려짐.
 - 에틀플랜(Ertl Plan)으로 명명된 서독의 구조정책은 “농업에 가능한 많은 인력을 유지시키려고 한 종래의 원칙은 농업과 타산업과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농산물 시장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가소득의 증대는 농업종사자수의 대폭적인 삭감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라는 정책기조를 명확히 함.
 - 서독은 1983년까지 농가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함. ①이농·은퇴희망농가: 직업훈련, 경영이양연금, ②잔류농가: 규모화자금, ③과도적 농가: 최저생계지원 등 사회보장
- 독일은 EU의 공동농업정책(CAP)을 수용하면서 2000년부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 독일에서 농업전환(Agrarwende)이라는 농정 패러다임이 새로이 대두된 배경은 광우병 파동 이후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는 것이 농정의 최우선 과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임.
 - 독일 연방농림성은 2001년 1월 부서명을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성”으로 개명하고, 업무 영역을 소비자 보호와 식품분야까지 확대함.
 - 현재 독일의 농업은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사이의 과도기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농정의 기본 방향 또한 농업생산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데 두고 있음.

□ 프랑스

- 프랑스에서도 전업적 자립경영을 목표로 한 구조정책의 주요수단은 선별적 지원과 이농촉진을 통한 세대교체였음.
 - 1961년 「농업기본법」에 입각한 구조정책의 추진은 암묵적으로 3유형의 농업경영을 전제로 함.
 - 비농업 부문과의 소득균형을 달성하고 특별한 농업정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영군(제1유형), 투자를 해도 시장 여건에 적응하여 충분한 소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영군, 즉 이농 및 경영이양에 관련된 장려금으로 은퇴를 촉진해야 할 경영군(제3유형), 양자의 중간에 위치한 경영군(제2유형)을 대상으로 제1유형의 catch-up을 촉진하는 것이 구조정책의 과제로 설정됨.
 - 이농종신보상금제도(IVD), 이농보상연금제, 조기은퇴연금제도 등을 통한 고용조정과 농촌건설토지정비회사(SAFER) 등을 통한 농지유통화 촉진책을 채용함.

- 이농과 영농규모 확대의 과정을 통한 프랑스의 농업구조개선 효과는 유럽의 여타국에 비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심각한 농산물과잉, 대규모 영농으로 인한 환경문제 악화, 농업소득의 지역격차 확대 등의 문제를 초래함.
 - 1987~90년간 5할의 농업경영에서 경영자를 포함한 가족노동 단위당 보수는 법정 최저임금을 하회하였으며, 저농업소득 층은 2경영체 당 1경영체를 차지하고, 지대별로는 평야지 45%, 조건불리지역과 산간지역 6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효율주의 우선의 선별적 구조정책 진행과정에서 양돈·양계 등 시설형 축산과 농후사료 다투입형 집약적 낙농이 집중적으로 입지한 브뤼타뉴 지방에서는 지하수와 지표수의 질산염 오염과 해양의 부영양화 등 환경오염이 심화되었으며, 또한 산간지에서는 방목지 방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함.

□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정부 주도 하에 농업을 성공적으로 근대화시킨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 정부는 생산기반정비, 연구개발, 교육훈련 등의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수출보조금, 환급금 등의 수출지원 정책을 실시해 왔음.
- 농업은 국토면적이나 수출 비중에 비추어 가장 큰 산업임.
 - 국토면적은 415만ha이나 토지면적은 339만ha이고 나머지는 하천·호소 등이며, 그 중 농업용지는 약 230만ha(68%)에 달함.
 - 2004년도 무역수지 흑자 312억유로 가운데 농업부문의 흑자는 214억 유로로서 전체 수지흑자의 68.3%를 차지하고 있음.
 - 총인구 대비 1.4%에 불과한 25만명의 농업인구가 국내총생산액의 8.9%를 생산하고 있음.
- 농업경영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품목별로 볼 때 구근류, 묘목, 분화, 절화, 송아지고기, 육계, 유지방, 식용감자 등은 시장의 요구에 잘 적응하여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곡물, 버섯, 과수, 채소, 어류, 설탕, 사료 등은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중간 정도이며, 그 밖에 산란계, 낙농,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등은 아직도 시장 적응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짐.
 - 농업생산은 전문경영 체제로서 1개 품목만 생산하는 개별농가 또는 농기업의 비중이 50%를 상회함. 예를 들어 유리온실 원예의 전문경영 비중은 90%, 축산업은 70%에 달하고 있음.
- 네덜란드 정부는 미래 비전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도 국제적 환경에서 유지될 수 있는 농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네덜란드 농업의 경쟁력이란 유럽 역내 시장과 새로운 역외 시장으로 진출하여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을 의미함.

□ 미국

- 미국은 풍부한 토지를 바탕으로 자본과 기술을 결합하여 자유시장 경쟁을 통해 농업구조조정을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임.
- 가족농장(family farm=농가) 수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서 효율성이 높은 대농의 생산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 농가 수는 1935년 680만호로 최고, 1974년까지 급격한 감소(연평균 2.7%), 이후 2002년까지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감소(연평균 0.6%)
 - 대농과 영세농의 비율이 증가하는 양극화가 진행중임. 1990년대 이후 초대형 농장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늘어남(32,000 → 64,000개소)
 - 대규모 농장의 생산액 비중은 1989년 29%에서 2002년 44%로 증가
- 농업구조 변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부문은 축산업임.
 - 양돈: 대규모 농장의 생산 비중이 1989년 44% → 2002년 89%
 - 낙농: 대규모 농장의 생산 비중이 1989년 26% → 2002년 54%
 - 곡물: 대규모 농장의 생산 비중이 1989년 8% → 2002년 15%
 - 면화와 담배는 변화율 기준으로 가장 빠른 규모화 속도를 나타냄.
 - 생산액 \$250,000 이하인 소규모 농가가 40%이상인 품목은 소, 곡물, 콩, 담배 등임.
- 농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 Cargill, Cenex Harvest States, Archer Daniels Midland(ADM) General Mills 등 4개 회사가 최종 곡물처리시설의 60% 소유
 - Cargill, ADM, Zen Noh 등 3개 회사가 옥수수 수출의 82% 담당
 - Tyson, ConAgra, Cargill , Farmland Nation 등 4개 회사가 쇠고기 포장업의 81% 차지
 - ADM, ConAgra, Cargill, General Mills 등 4개 회사가 밀가루 제분 시설의 61% 소유

□ 뉴질랜드

- 뉴질랜드는 1984년부터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강력한 농정개혁을 추진하여 시장지향적 농업구조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985년부터 농업보조를 폐지하였으며, 저리의 농업개발자금 지원 용자는 중단되고, 기타 자금의 이자율도 시장 금리에 접근토록 함.
 - 농림부 조직을 1987년 10국을 4국으로 통합함. 1992년 농촌지도 사업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운영, 1995년에 기업에 매각함. 1995년에 수산부를 신설하여 수산업무를 분리하고, 1998년 임업부를 농업부와 통합함.

- 농정개혁 이후 농업생산구조는 시장과 소비자 지향적으로 변화함.
 - 양모와 유제품의 생산은 큰 변화가 없으나 육류 생산은 감소하고 원예 생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 축산 부문에서 전통적인 축산업인 양, 육우, 유우의 생산 외에 사슴과 염소 사육농가가 크게 늘어남. 사슴, 염소 등의 사육은 양이나 소의 사육에 비해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농가 호당 경지면적의 감소를 가져옴.
 - 원예 생산의 증가는 주로 키위 생산의 증가에 기인하며 육류 생산의 감소는 주로 양고기 생산이 감소한 때문임.
 - 농업보조 폐지 이후 농가의 영농활동은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전개되고 있음. 또한 영농활동의 기반이 농촌관광과 같은 활동까지 확대되어 농촌경관이나 환경 관리에도 관심을 갖게 됨.

- 최근 뉴질랜드 농정의 초점은 생물보호(biosecurity), 동물복지, 식품안전, 자원 및 환경 보호 등에 맞추어져 있음.
 - 정부가 추진중인 농정 과제로는 낙농 및 원예산업 구조조정, 생산자 위원회(육류, 양모, 돼지고기, 염소, 낙농 등) 기능 조정 등이 있음.

□ 일본

- 일본은 1961년에 농업기본법을 통해 “자립경영농가” 육성을 법제화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당초 의도한 자립농가는 현재까지도 전 농가의 5%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
 - 자립농가 육성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1970년대부터 “중핵농가”, “새로운 상층농”, “기업적 경영” 등으로 정책대상을 수정하기도 하였음.
- 1990년대 들어 UR 타결을 계기로 “신농정”을 제창하고 현대적인 농업경영체 육성 정책을 강화함.
 - 전업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를 위하여 농용지이용증진법, 농업경영강화촉진법 등을 통해 지원함.
 - 농업경영의 근대화를 위하여 가족농의 법인화(1호 1법인)농업법인제도를 활성화함.
- 1995년부터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선별적인 농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인정농업자 제도는 의욕과 능력을 가지고 농업경영 전문가를 지향하는 자로서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기초 자치단체인 시정촌이 심사를 거쳐 인정하는 체계임(근거법: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 * 정책대상을 지자체가 지역의 부존자원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인정농업자는 성별, 전·겸업별 제한은 없으며, 단지 경영규모 대소, 영농유형, 법인경영 등에 대해서는 시정촌의 상황에 따라 기준이 설정됨.
 - 인정농업자에게는 금융, 세제, 연금 등의 지원조치가 있으며, 2007년부터 실시되는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직접지불 대상이 됨.
 - 인정농업자 수는 2005년에 19만 2,941인(그중 법인 8,186)으로 전체 농가의 7% 정도에 해당함.

□ 중국

- 중국은 1980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후 농촌지역에 소재한 향진기업의 성장 등 산업화에 따라 농업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농가의 노동력 구조는 겸업화의 방향으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음.
 - 경제가 비교적 발전한 동부지역에서는 농가 노동력의 40%가 비가족 경영에 투입되고 있음.
 - 가족경영의 노동력 투입 감소분이 모두 농작물, 원예작물, 축산 등에서 발생함. 즉, 농업부문에는 잉여 노동력이 존재하고 있어 취업기회만 있으면 농업에서 빠져나가는 것임을 시사함.
- 1998년부터 착수한 농업구조조정 정책의 영향으로 농작물의 입지분포와 각 지역의 작목 선택에 있어 비교우위가 나타남.
 - 1998년과 비교하면 2003년에 식량작물 면적은 1,400만ha 감소, 유류작물은 200만ha 증가, 면화는 650만ha 증가, 채소는 560만ha 증가하였고, 각 작물의 증감율은 -13%, 16%, 15%, 46% 등의 급격한 변화임.
 - 지역별로는 동부의 곡물 특히 장립종(인디카) 쌀의 감소가 큰 반면, 원예작물 등의 상품작물 재배가 급증함.
- 농가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구조에서 농외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임.
 - 농가의 연간 순수입은 1978년 133위안에서 2002년에는 2,500위안으로 17배가 넘는 증가를 보였고, 물가상승의 영향을 제한 실질금액에서도 4배가 넘게 증가함.
 - 농가소득 가운데 제1차 산업의 비율이 계속 저하하여, 2000년에는 약 50%를 차지함. 그 대신 2, 3차 산업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2000년에는 제1차 산업의 비중이 육박하는 수준으로 상승함.

제 3 장

산업화와 농업구조의 동향

1. 산업구조조정의 경과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급속하게 산업구조 전환을 실현

- 경제발전에 따른 농업 비중 감소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경험이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2~5배 빠른 속도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경험함.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다른 직업으로 전직이 어려운 고령자가 농업 부문에 누적되어 경쟁력이 취약한 인력구조를 초래함.
 - 생산구조조정(농업생산 비중 감소 40%→7%)에 소요된 기간: 유럽 5개국 평균 117년, 미국 92년, 일본 73년, 한국 26년
 - 고용구조조정(농업취업자 비중 감소 40%→16%)에 소요된 기간: 유럽 5개국 평균 64년, 미국 42년, 일본 31년, 한국 14년
- 선진국들의 경험에 의하면, 고용구조 변화는 생산구조 변화 후 대략 12~13년의 시차를 나타내며, 농업취업자의 노령화 추세는 농업생산 비중의 감소 속도가 최고 수준에 도달한 후 약 20년간 지속되다가 그 후 40여년 정도에 노령화 추세가 소멸되는 경향임.

- 생산구조의 변화 시점 (1차: 1965년, 2차: 1973년)
 - 1965년 이전: 농업 > 서비스 > 제조업
 - 1965~'73년: 서비스 > 농업 > 제조업
 - 1973년 이후: 서비스 > 제조업 > 농업
- 고용구조의 변화 시점 (1차: 1978년, 2차: 1985년)
 - 1978년 이전: 농업 > 서비스 > 제조업
 - 1978~'85년: 서비스 > 농업 > 제조업
 - 1985년 이후: 서비스 > 제조업 > 농업
- * 농업생산 비중이 40%까지 감소하면 농업부문이 서비스부문보다 생산규모가 작아지는 구조전환이 나타남

□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부문에는 고령자가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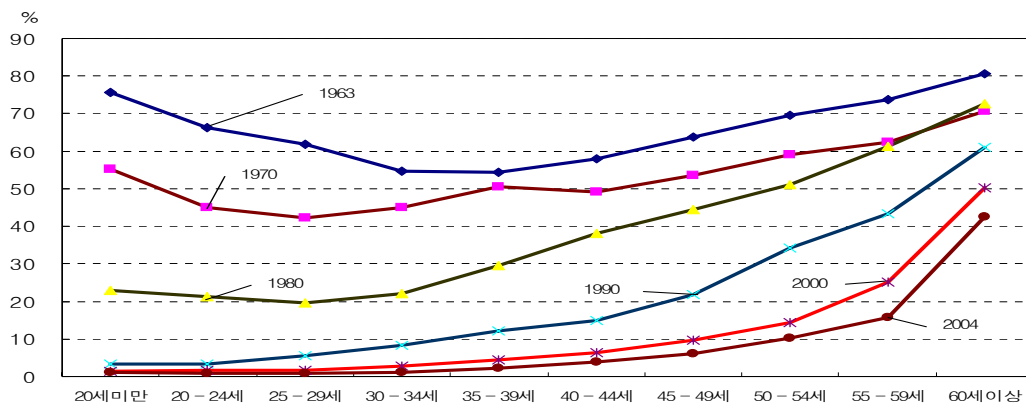
- 한국 경제는 선진국 수준이나 농업은 개도국 수준이라고 일컬어짐. 2005년 현재 OECD 국가들의 평균을 보면 국내총생산에 대한 농업의 비중은 1% 내외이고 농업인구 비중은 2~3%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대체로 OECD 국가들의 평균 두 배 수준임.
- 농업GDP 비중은 빠르게 감소('70~'05년간 연평균 6.0%)하는 반면 농업취업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감소('70~'05년간 연평균 5.2%)함으로써 농업 부문에는 취업자 과잉 현상이 나타나게 됨.
 - 농업GDP 비중: ('70) 25.5% → ('80) 13.8 → ('90) 7.8 → ('05) 2.9
 - 농업취업자 비중: ('70) 49.5% → ('80) 32.4 → ('90) 17.1 → ('05) 7.6
- 농업과 비농업간의 직업 전환이 매우 제한적이며, 선진국들도 농업으로부터 비농업부문으로의 순전직률은 대략 2%에 못미침.
 - 농업/비농업 순전직률 : 독일(0.35%), 프랑스(1.10%), 네덜란드(1.97%), 영국(1.04%), 덴마크(1.35%), 일본(-0.14%), 한국(1.21%)

표 3-1. 국가별 농업취업자 비중 추이

	1960	1970	1980	1990	2000	2004
한 국	61.3	49.1	37.1	18.1	10.0	7.7
일 본	33.1	19.6	11.0	7.3	4.1	3.2
프랑스	22.1	13.6	8.3	5.5	3.3	2.7
독 일	15.0	8.7	6.9	4.0	2.5	2.1
미 국	6.6	4.3	3.5	2.8	2.1	1.8
영 국	4.0	2.8	2.6	2.2	1.8	1.7

자료: FAO Yearbook.

그림 3-1. 농업취업자의 연령구조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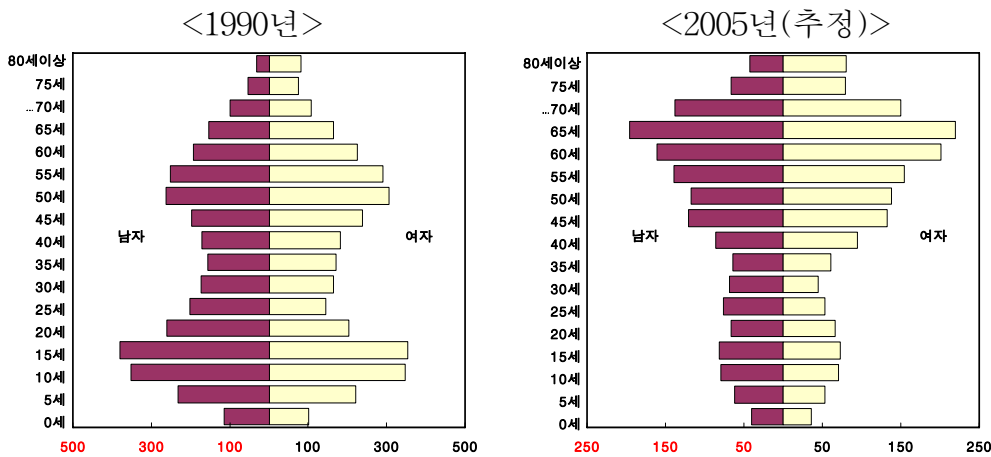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농업구조의 변화 동향

□ 후계인력 부족으로 고령경영주 비중이 계속 증가

- 농가인구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1980년대까지는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을 나타냈으나, 그 후 점차 고령층이 비대해지면서 1990년에는 10대와 50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두터운 '항아리형' 구조를 나타냈고, 2005년에는 60대 비중이 최빈수인 '역삼각형'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 고령화 지수(65세 이상 인구/14세 이하 인구): ('90) 56 → ('05) 306

그림 3-2. 농가인구 연령별 구성 변화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 경영주는 고령화하는 반면 신규취농 인력이 미흡하여 은퇴연령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농가(대부분 독신가구)로 잔류하는 실정임.
- 50세 미만 경영주는 1995년 27.9%에서 2005년 17.0%로 감소
- 70세 이상 경영주는 1995년 12.7%에서 2005년 24.3%로 증가
- ※ 영농후계자 보유농가 비율: ('90) 16.4% → ('95) 13.1% → ('00) 11.0%

표 3-2. 경영주 연령별 농가 수의 추이

단위 : 천호, %

연 도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합 계
1990년	37 (2.1)	221 (12.5)	373 (21.1)	584 (33.0)	403 (22.8)	150 (8.5)	1,767 (100.0)
1995년	12 (0.8)	134 (8.9)	272 (18.2)	447 (29.8)	445 (29.6)	190 (12.7)	1,501 (100.0)
2000년	7 (0.5)	84 (6.1)	238 (17.2)	348 (25.2)	479 (34.7)	227 (16.4)	1,383 (100.0)
2005년 (추정)	2 (0.1)	31 (2.5)	184 (14.4)	287 (22.5)	460 (36.2)	309 (24.3)	1,273 (100.0)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에서 작성. 2005년 연령별 구성은 추정치.

□ 영농규모 확대와 농지, 가축 등의 대농 집중

- 농가호수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경지면적 감소는 상대적으로 완만하여 호당 경지규모 확대가 진전됨.
 - 농가호수는 1970년 기점으로 감소로 반전되어 2005년까지 연평균 1.9%씩 감소하였으며, 경지면적은 1968년 기점으로 감소로 반전되어 대략 연평균 0.6%씩 감소

그림 3-3. 농가 수 및 경지면적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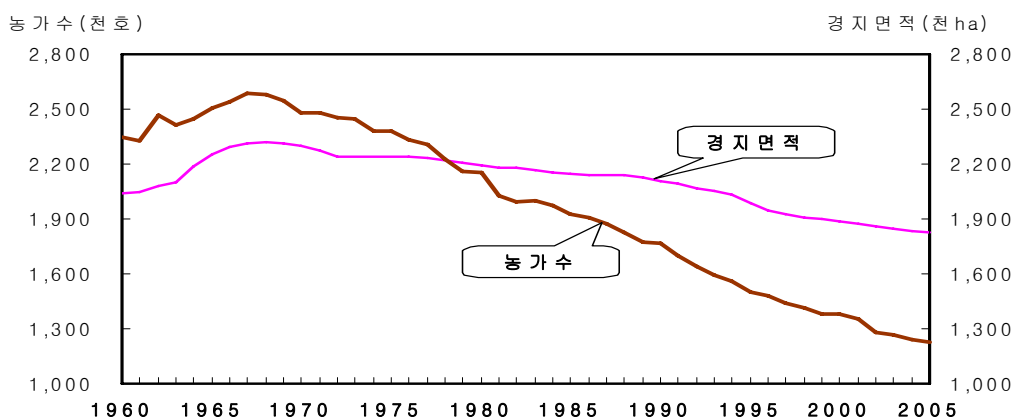


표 3-3. 농가 및 경지면적의 연평균 변화율 추이

단위: %

	1960~70	1970~80	1980~90	1990~95	1995~2000	2000~05
농가호수	0.6	-1.4	-2.0	-3.2	-1.6	-1.6
총경지면적	1.2	-0.5	-0.4	-1.2	-1.0	-0.7

자료: 농림업주요통계에서 작성.

- 1990년대 들어 경지규모 2~3ha 중간계층의 비중이 감소하고 0.5ha 미만과 3ha 이상 계층이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농가계층의 양극화 경향이 명확해짐.
 - 경지규모계층 분화의 분기점이 계속 상향이동하는 추세임.

표 3-4. 경지규모별 농가계층분화 동향

단위: %

연도	전체 (비율)	0.5ha미만	0.5~1.0ha	1.0~1.5ha	1.5~2.0ha	2.0~3.0ha	3.0ha이상
1960	2,350 (100.0)	42.9	30.1	20.7		6.0	0.3
1970	2,411 (100.0)	32.6	34.2	18.5	8.0	5.1	1.5
1980	2,127 (100.0)	28.8	35.1	20.6	9.0	5.1	1.5
1990	1,743 (100.0)	27.7	31.2	20.2	11.0	7.4	2.5
2000	1,369 (100.0)	32.2	27.7	16.0	9.6	8.3	6.2
2005	1,255 (100.0)	36.5	26.4	22.3		7.4	7.4

자료: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및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5년 잠정치.

- 대규모 농가로의 농지 집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시설원예와 축산 등은 대농의 생산 집중이 현저함.
- 논 3ha 이상 경영농가는 1990년에 호수 비중 1.2%, 면적 비중 6.2%였으나, 2004년에는 호수 비중이 4.8%, 면적 비중이 26%로 증가
- 한우 20두 이상 사육농가는 1990년에 호수 비중 0.9%, 두수 비중 13.6%였으나, 2004년에는 호수 비중 10%, 두수 비중 57.5%로 증가

표 3-5. 대농의 농가 비중 및 생산 비중 추이

단위: %

연도	1990		1995		2000		2004(추정)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논 3ha 이상	1.2	6.2	2.8	14.8	3.8	20.0	4.8	26.0
밭 1ha 이상	7.9	33.2	10.7	41.3	10.6	45.2	10.9	48.5
과수원1ha이상	10.5	38.2	13.6	42.9	14.1	44.3	14.6	45.7
시설2천평이상	6.1	25.5	12.4	38.3	10.5	47.1	9.6	57.9

연도	1990		1995		2000		2004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한우 20두 이상	0.9	13.6	4.0	27.5	5.3	46.0	10.0	57.5
젖소 50두 이상	2.0	11.4	5.6	17.8	28.0	50.4	46.8	69.2
돼지 1천두 이상	0.3	23.3	2.4	36.5	9.8	60.2	21.6	75.3
닭 1만수 이상	1.4	68.7	1.3	82.2	1.3	91.2	2.0	94.0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농림부, 가축통계.

- 한편, 농가 중에는 농업경영체로 간주하기 어려운 영세고령농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은 농지보유 의향이 강하고 은퇴시까지 자급적 영농을 지속하려는 경향임.
- 영세농 성격(경지 0.5ha 미만 농가, 2004년): 농가수 46만호, 경지면적 합계 123천ha, 경영주 평균 연령 63세, 65세 이상 비율 51.6%

표 3-6. 영세농의 경영체 성격(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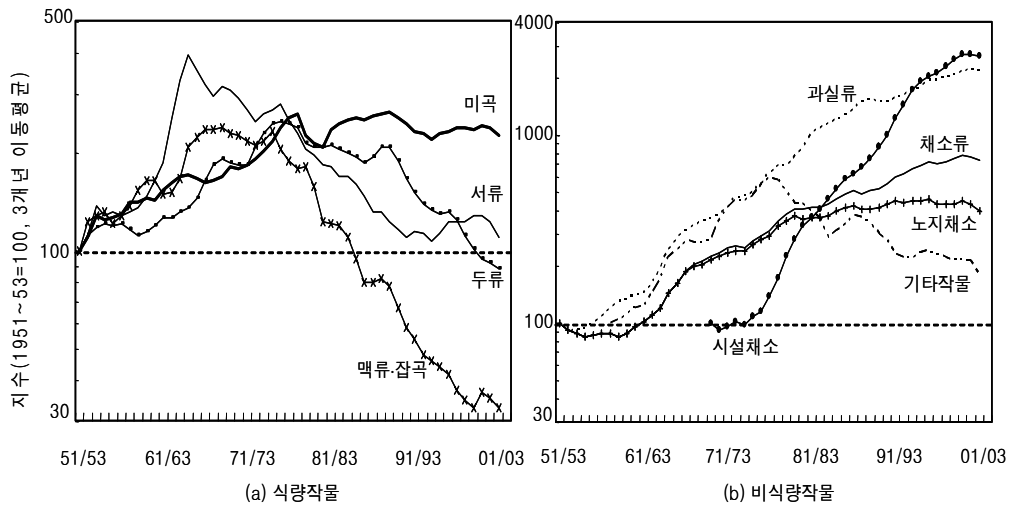
구 분	0.5ha 미만	0.5~1.0ha
총농가수 (천호)	464.3	322.4
보유 경지면적 (천ha)	122.6	237.2
경영주 연령 평균 (세)	63.1	62.1
65세 이상 경영주 비율 (%)	51.6	47.2
호당 가구원 수 (명)	2.53	2.69
호당 농업종사자 수 (명)	1.80	2.02

자료: 농업기본통계에서 작성.

□ 농업생산은 성장작목과 쇠퇴작목으로 분화

- 지난 반세기 동안의 농업생산 구조의 변화를 보면, 대략 1970년대와 1990년대의 두 차례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여짐.
 - 1970년대 중반을 경계로 식량작물 생산이 정체 내지는 감소로 전환되면서 과일, 채소, 축산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이들 성장작목이라 불리는 과일과 축산의 생산 증가가 다소 정체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
- 최근 농업생산구조는 시장개방 영향과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서서히 조정되는 경향이며, 특히 시장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농산물의 생산 증가가 정체되면서 총생산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품목별로 성장과 쇠퇴가 드러나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

그림 3-4. 경종작물의 생산 추이(1951~2003, 1951/53=100)



- 1990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품목은 채소와 축산이고, 식량작물은 1995~2000년간에는 성장하였으나 2000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채소와 과실은 1995년 이후 성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임.

표 3-7. 농업생산액의 품목류별 추이

단위: 10억원(2000년 기준)

구분	식량작물	채소	과실	특작기타	축산	합계
1990년	12,488 (41.0)	5,664 (18.6)	2,479 (8.1)	3,125 (10.3)	6,699 (22.0)	30,455 (100.0)
1995년	9,975 (32.1)	7,534 (24.2)	3,482 (11.2)	2,982 (9.6)	7,125 (22.9)	31,098 (100.0)
2000년	11,362 (35.7)	6,858 (21.6)	2,603 (8.2)	2,959 (9.3)	8,035 (25.3)	31,818 (100.0)
2004년	9,201 (29.8)	6,661 (21.6)	2,508 (8.1)	3,088 (10.0)	9,428 (30.5)	30,885 (100.0)
변화율 (%)						
90~95	-4.39	5.87	7.03	-0.93	1.24	0.42
95~00	2.64	-1.86	-5.65	-0.15	2.43	0.46
00~04	-5.14	-0.73	-0.93	1.07	4.08	-0.74
90~04	-2.16	1.16	0.08	-0.09	2.47	0.10

주: 생산액은 3개년 이동평균치. 특작기타에는 특용 및 기타작물 포함.

제 4 장

시장개방에 의한 농업구조의 변화와 전망

1. 분석 방법과 시나리오 설정

- 농업구조 주요지표의 변화를 전망하고, 구조조정 속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간별·시나리오별 변화율을 계산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부문 총량모형(KREI-ASMO)를 이용함.
 - 연평균 변화율 계산에서 2005년 이전의 실측치는 단기변동을 배제하기 위해 3개년 이동평균치를 이용함.

- 분석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상황으로 설정함.
 - (1) UR 이전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 1995년 이후에 적용된 UR 협상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1995년 관세 수준이 이후 전망기간(1996~2017) 동안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함.
 - 다만, 과실류는 위 품목별 관세 감축방식을 따르되, 사과, 배, 감, 감귤, 복숭아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식물검역을 고려하고(식물검역 기간상한은 2011년까지로 설정), 포도와 복숭아는 FTA 품목으로 설정함. 단, 포도는 식물검역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이들 FTA 품목은 2005년을 기점으로 향후 10년 이후 완전 개방되는 상황을 가정함.

(2) 기준전망 (baseline projection)

- 기준전망을 위한 시나리오에서 쌀은 2004년 쌀협상 결과(WTO에 통보한 내용)를 반영하였고, 쌀 이외 품목은 2004년 품목별 양허 관세 수준이 전망기간동안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함.
- 다만, 품목별로 다음과 같은 정책변수를 고려함.
 - 쌀은 2005부터 시행되는 쌀농업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실시내용을 반영하고(고정형 직불: 생산중립, 변동형 직불: 생산연계), 공공비축제(양곡연도말 재고 600만석 유지) 실시를 가정함.
 - 과실류는 위 품목별 관세 감축방식을 따르되, 사과, 배, 감, 감귤, 복숭아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식물검역을 고려함(식물검역 기간상한은 2011년까지로 설정).
 - 포도와 복숭아는 FTA 품목으로 설정함. 단, 포도는 식물검역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이들 FTA 품목은 2005년을 기점으로 향후 10년 이후 완전 개방되는 상황을 가정함.

(3) WTO/DDA 농업협상 시나리오

- KREI-ASMO 2005를 이용하는 이 연구는 농업부문 중장기 과급영향을 계측하기 위해 품목별 중장기 시장개방 상황을 반영하여야 함.
- 쌀은 2004년 쌀협상 결과(WTO에 공식통보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함.
 - 쌀에 대한 관세화유예 조치를 향후 10년간(2014년) 더 연장함.
 - MMA는 2005년 22만 5,575톤에서 시작해서 매년 균등하게 늘려 2014년 40만 8,700톤(1988~1990년 평균소비량의 7.96%)까지 증량함. MMA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5%이고, 수입방식은 기존의 국영무역방식으로 함.
 - 밥쌀용 시판물량은 2005년 매년 MMA 도입물량의 10%에서 2010년 30%까지 확대하고, 이후연도는 30% 수준을 유지함.
- 쌀 이외 품목은 WTO/DDA 농업협상 및 FTA 결과에 의해 시장개

방 상황이 결정될 것이나, 최근 협상이 결렬되어, 그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품목별 시장개방 시기와 폭을 예측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개방이후의 중장기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화 대안을 가정하여야 함. 쌀 이외 품목은 관세감축이 2009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함.

- 쌀 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WTO/DDA 협상과정에서 FIPs(five intrerested parties, 미국, 브라질, 인도, EU, 호주 5개국을 지칭) 제네바회의에 앞서 미국에 의해 제안된 안에 이어, G20+그룹에 의해 제안된 내용을 참조해서 설정함. G20+그룹의 제안은 관세구간과 감축폭에 있어 미국과 EU안의 중간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4) WTO/DDA 개도국 시나리오 (G20안)

- 일반품목(쌀과 민감품목 이외): 관세구간: 30/80/130%, 관세감축률: 25/30/35/40%, 관세상한: 쌀은 관세상한 없음, 쌀이외 품목 150%
- 민감품목(고추, 마늘, 유제품, 감귤, 쇠고기, 사과, 배)
 - TRQ 품목(고추, 마늘, 낙농품, 감귤): 관세감축은 선진국의 2/3수준 (일반 관세감축의 47%), 관세상한(150%), TRQ 증량은 2002-2004 평균 국내 소비량의 4%에서 6%까지 증량
 - 비TRQ 품목(쇠고기, 사과, 배): 관세감축은 일반 관세 감축폭의 55%, 관세상한(150%) 적용, TRQ 증량은 없음.
- 이행기간: 10년(2010~2019)

(5) 한·미 FTA 시나리오

- 10년간 단계적 관세철폐, 쌀은 예외로 개도국 대우 적용
- 관세감축 이행기간 및 방법: 2008년부터 이행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관세율은 단계적으로 일정하게 감축
- 품목별(또는 품목군) 수입농산물의 대미 수입가격은 중장기에 최소한 현재 평균가격 수준으로 수렴함을 가정함.
- 국내 정책에 대한 가정은 동일하게 적용함.

2. 주요지표의 전망과 시장개방 효과 분석

- 이하에서는 시장개방 시나리오에 의한 농업구조 주요지표의 전망 결과를 비교 분석함. 다만, 이 분석의 주안점은 시장개방 효과로서 농업구조조정 속도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며, 따라서 주요지표의 기간별·시나리오별 연평균 변화율을 비교하여 해석함. 그리고 시장개방 시나리오의 영향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주요지표의 연도별 추이를 도표로 제시함.
 - 시장개방 시나리오에 따른 연도별 주요지표 전망치는 <부록 1>에서 정리하였음.

2.1.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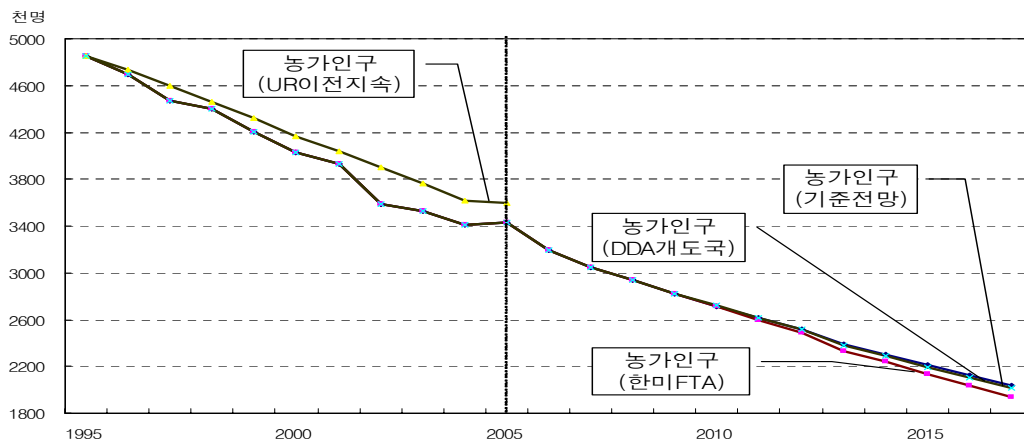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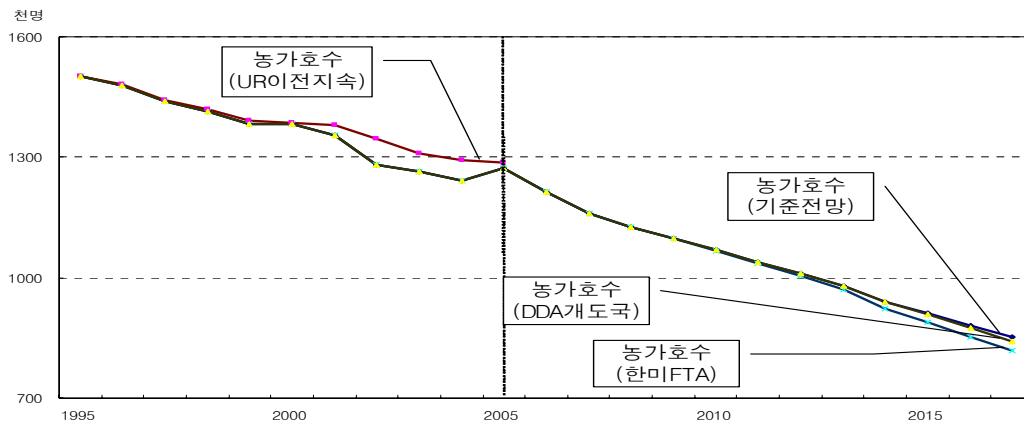
- 농가호수와 농가인구는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 들어 감소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시장개방으로 인해 감소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추세임. 특히 농가호수 감소 속도는 UR로 인해 0.49% 포인트 가속화 되었으며, 향후 한미FTA 체결시는 기준전망보다 0.23% 포인트 정도 더 빨라질 것으로 분석됨.
 - 농가호수 연평균 감소율은 UR 이전 10년간은 2.43%, 1995~2005년간은 2.02%로 감소율이 소폭 하락했음. 2005~15년간은 기준전망과 한미FTA 체결시 각각 3.28%, 3.5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개방 폭이 커질수록 감소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됨.
 - 농가인구는 UR 이전 10년간에는 연평균 5.43% 감소를 보였으나 1995~2005년간은 3.80%로 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되었음. 2005~15년간의 감소율은 기준전망시에는 4.31%, 한미FTA 체결시에는 4.66%로 전망됨.
 - 농림업취업자는 UR 이후 10년간 연평균 감소율이 2.72%로 이전에 비해 1.64% 포인트 줄었고, 2005년 이후는 기준전망과 한미FTA 체결시 각각 4.70%, 5.05%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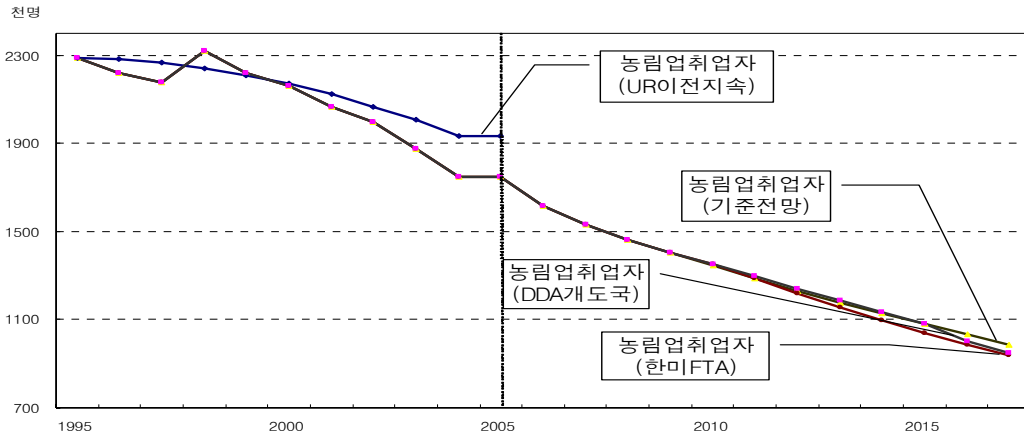
표 4-1.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의 연평균 변화율

단위 : %

구 분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1985 - 1995	실측치	-2.43	-5.43	-4.36
1995 - 2005	실측치	-2.02	-3.80	-2.72
	UR이전지속	-1.53	-2.96	-1.68
2005 - 2015	기준전망	-3.28	-4.31	-4.70
	DDA개도국	-3.32	-4.39	-4.66
	한미FTA	-3.51	-4.66	-5.05

그림 4-1.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의 변화 전망





2.2. 경지면적, 총재배면적, 쌀 재배면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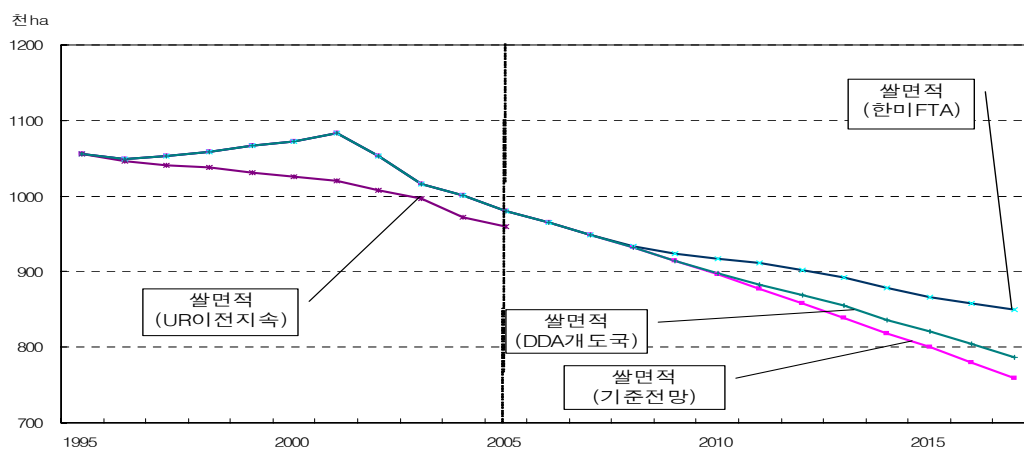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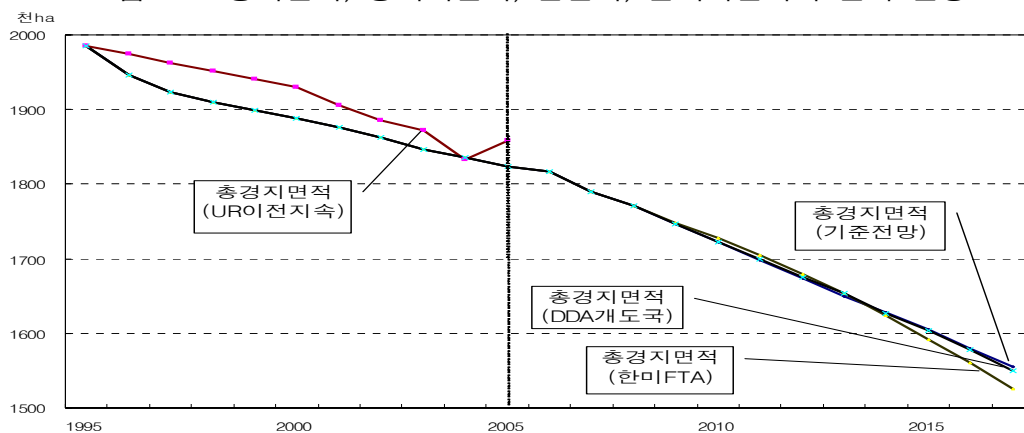
- 경지면적과 총재배면적은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이 비교적 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UR 효과는 0.22% 포인트 정도로 분석됨. 특히 2005년 이후 전망에서 기준전망에 비해 한미FTA 체결시 경지면적 감소가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쌀 관세화유예로 소득이 유리한 벼 재배가 유지되기 때문임.
- 경지면적 감소율은 UR 이전과 이후에 대략 연평균 0.8~0.9%를 유지하였으나, 앞으로는 좀더 가속화되어 연평균 1.3~1.4%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 총재배면적 연평균 감소율은 UR 이전 1.83%, 이후는 1.34%로 나타났고, 2005~2015년간은 기준전망 1.55% 감소, 한미FTA 체결시는 1.40% 감소할 전망이다.
- 쌀 재배면적 연평균 감소율은 UR이전 1.43%, 이후 0.75%로 나타났으며, 이후 2015년까지의 전망에서는 한미FTA 체결시 감소율은 1.22%로 기준전망(2.01%)에 비해 쌀 면적 감소는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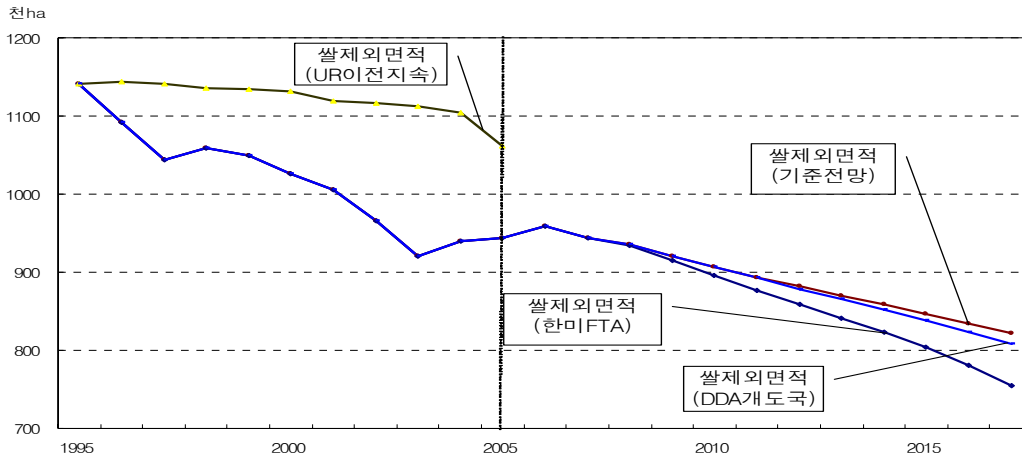
표 4-2. 경지면적, 총재배면적, 쌀면적, 쌀제외면적의 연평균 변화율

단위 : %

		총경지면적	총재배면적	미곡	쌀제외면적
1985 - 1995	실측치	-0.76	-1.83	-1.43	-2.20
1995 - 2005	실측치	-0.88	-1.34	-0.75	-1.92
	UR이전지속	-0.66	-0.83	-0.95	-0.72
2005 - 2015	기준전망	-1.27	-1.55	-2.01	-1.09
	DDA개도국	-1.28	-1.47	-1.75	-1.18
	한미FTA	-1.36	-1.40	-1.22	-1.60

그림 4-2. 경지면적, 총재배면적, 쌀면적, 쌀제외면적의 변화 전망





2.3. 농업총소득, 농가소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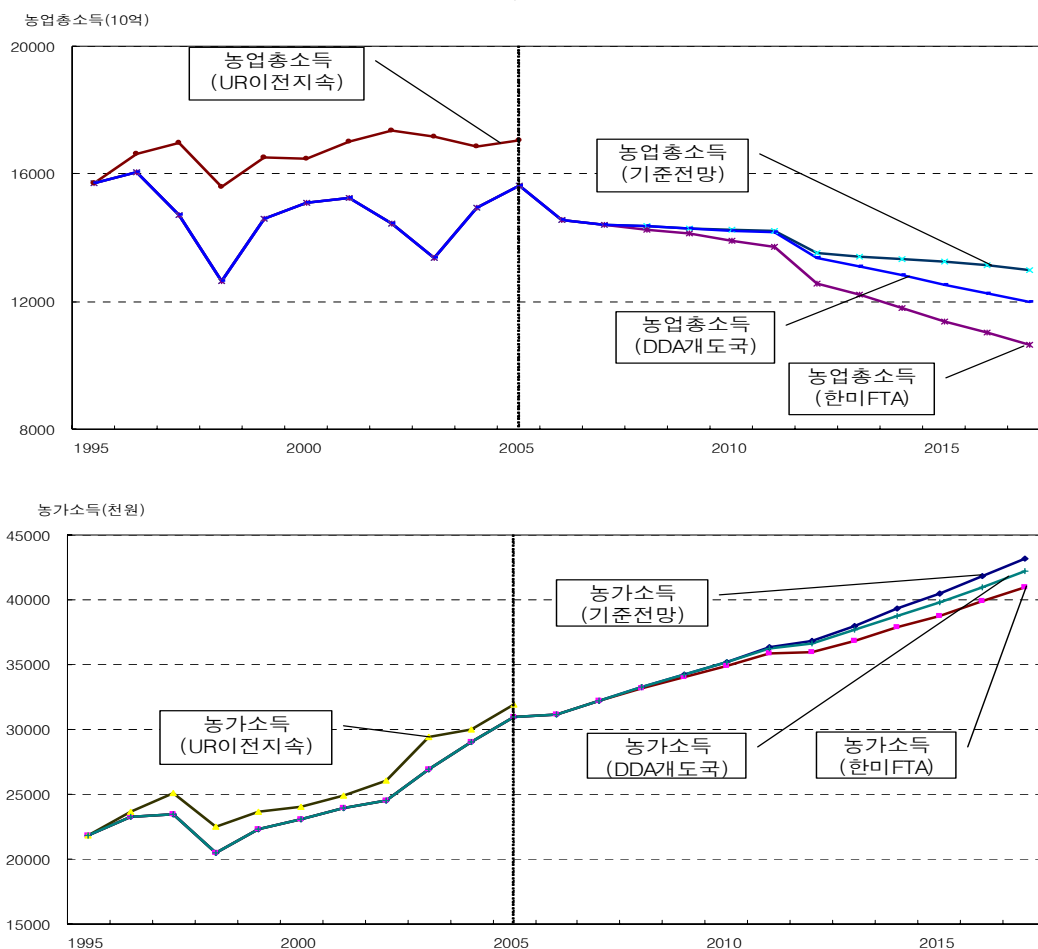
- 농업총소득이나 농가소득은 시장개방에 따라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UR에 따른 농업총소득의 영향은 1.90% 정도로 계측되었으며, 2005~2015년간 농업총소득은 한미FTA 체결시에 기준전망에 비해 연평균 1.47% 포인트 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농업총소득은 1985~1995년 기간 동안 8.36%증가했지만 1995년 이후 감소로 전환되면서 시장개방에 따른 시나리오 전망에서 감소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됨. 이는 농업소득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쌀소득보전직불금을 포함한 농외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농가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 UR 이전 10년간의 농가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14.24%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기록하였으며, UR 이후에도 연평균 3.14% 가량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한미FTA 타결시 2005~15년의 연평균 농가소득은 0.45%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 4-3. 농업총소득, 농가소득의 연평균 변화율

단위 : %

		농업총소득	농가소득
1985 - 1995	실측치	8.36	14.24
1995 - 2005	실측치	-1.09	3.14
	UR이전지속	0.81	3.89
2005 - 2015	기준전망	-1.64	2.73
	DDA개도국	-2.18	2.55
	한미FTA	-3.11	2.28

그림 4-3. 농업총소득, 농가소득의 변화 전망



2.4. 농업생산액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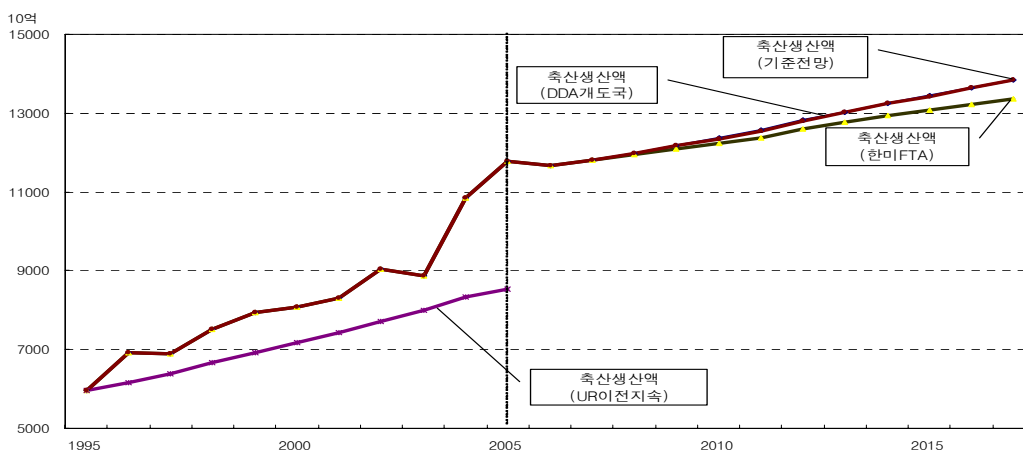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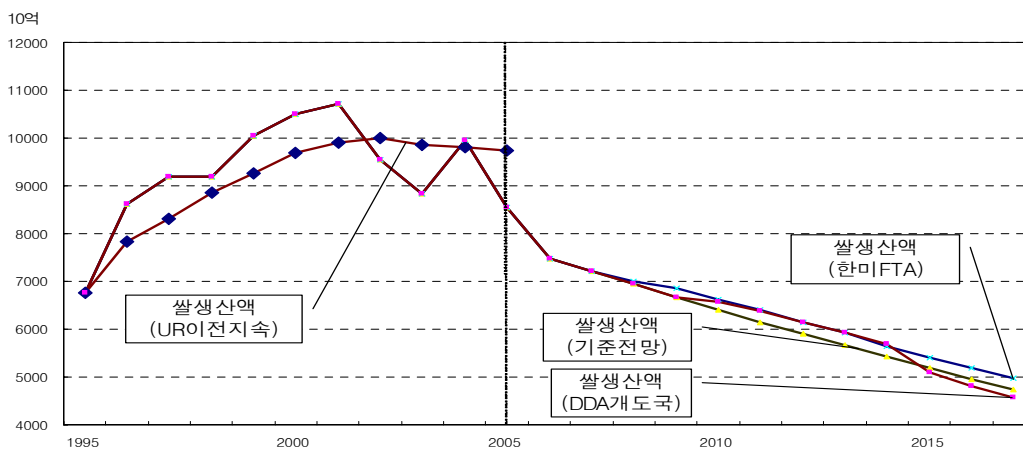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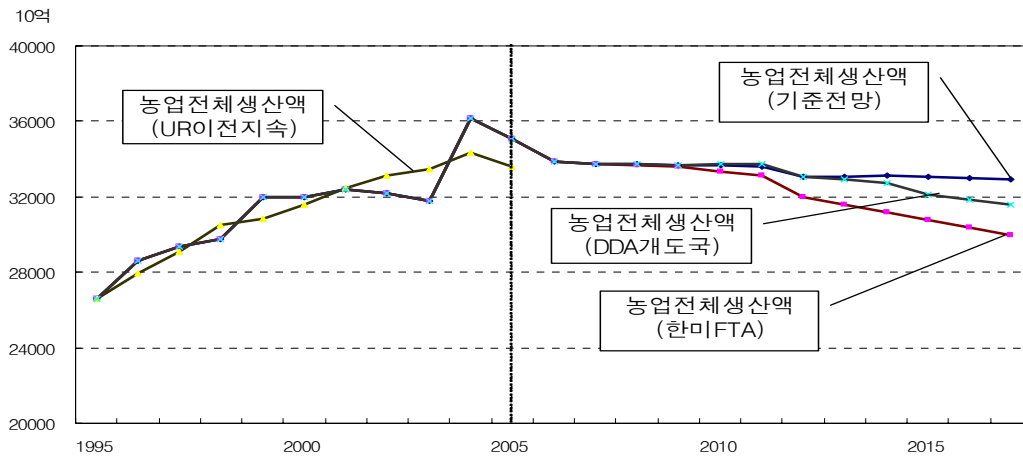
- 농업생산액은 시장개방에 따라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농업생산액은 1985~95년간 연평균 8.08%씩 성장했으나, 1995~05년간은 연평균 2.96%로 하락했으며, 앞으로 2005~15년간은 마이너스 0.59%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됨. 또한 한미FTA 체결시는 0.72%포인트 감소한 연평균 마이너스 1.31%로 전망됨.
 - UR 전후의 품목별 농업생산 동향으로, 생산 감소가 심한 품목 순으로 생산액 실측치의 연평균 변화율을 비교하면 과실 16.42%, 채소 10.84%, 쌀 2.85%, 축산 0.59% 등의 순임.
 - 1995~2005년 실측치와 UR 이전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UR 이후 쌀은 1.36% 포인트의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나머지 품목들은 증가하는 추세로서 특히 축산은 2.62% 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예측됨.
 - 2005~15년의 기준전망과 한미 FTA 체결시를 비교하면, 생산 감소가 많은 품목 순으로 연평균 변화율은 과실 3.50%, 채소 1.42%, 축산 0.27% 등으로 예측되었으며, 쌀의 생산 감소는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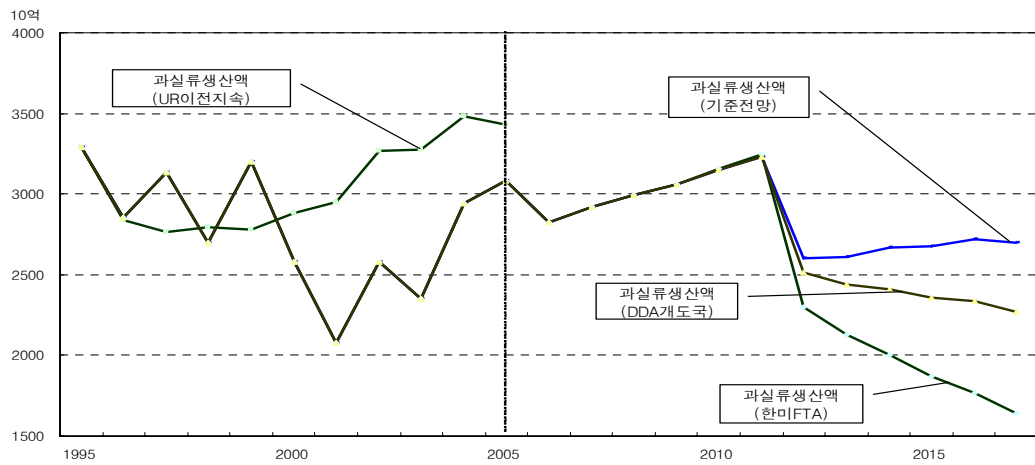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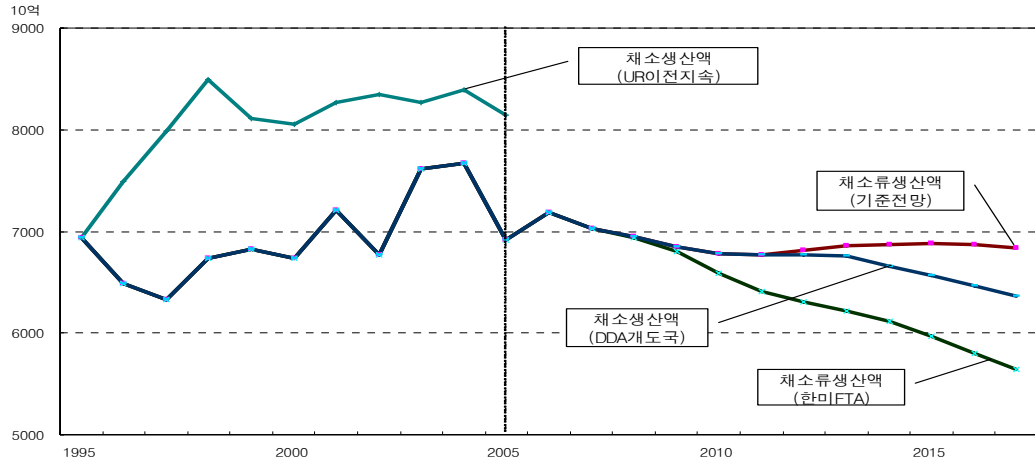
표 4-4. 농업생산액의 연평균 변화율

단위 : %

		농업전체	쌀	채소류	과실류	축산
1985 - 1995	실측치	8.08	5.19	12.47	15.80	6.87
	UR이전지속	2.36	3.71	1.61	0.42	3.66
1995 - 2015	실측치	2.96	2.35	1.63	-0.62	6.28
	기준전망	-0.59	-4.83	-0.05	-1.39	1.34
	DDA개도국	-0.88	-5.04	-0.51	-2.65	1.33
	한미FTA	-1.31	-4.45	-1.47	-4.89	1.07

그림 4-4. 농업생산액의 변화 전망





3. 농가구조의 변화와 전망

3.1. 분석 시각과 방법

- 최근의 농가구조 변화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서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및 대농의 경영규모 확대를 들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시장개방이 진전되는 가운데 농가의 경영주 연령별 분포, 그리고 대농의 생산비중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망하기로 함.
 - * 이 분석은 과거의 추이에 의한 전망이며, 따라서 향후의 정책 지원 여하에 따라 농가구조가 변할 수 있음.
- 농가의 연령별 분포를 전망하는 방법으로 코호트분석법(Cohort component method)이 널리 이용됨. 이 분석에서도 1990, 1995, 2000년도 농업총조사를 이용하여 연령별 변화율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코호트 분석에 의한 경영주 연령 분포를 추정함.
 - 코호트분석법은 5년 단위의 연령 계층에 대한 인구적 지표의 변화율이 시간에 동일하게 변화한다는 가정 하에 축차적으로 적용하면서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임.
 - 연령 계층별로 적용하는 이농율이나 사망률 등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이동통계를 이용함.
 - 농업경영주의 연령별 분포를 추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농가인구 추정과는 달리 농업경영주로 진입 또는 퇴출되는 확률을 계산해야 하므로, 농업총조사의 1990~1995 및 1995~2000년 변화율을 계산하여 이러한 추세가 2015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가정함.
- 농가의 경영규모별 생산 비중은 경종작물에 대해서는 농업총조사를, 가축사육 두수에 대해서는 가축통계를 이용할 수 있음. 따라서 여기서는 1990, 1995, 2000년도 농업총조사 및 가축통계를 이용하여 경영규모 계층별 농가비율의 추이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추정함.

- 경종농업은 농업총조사 1990, 1995, 2000년 결과를 이용하여 과거 5년간 변화율 추세가 2010, 2015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 축산은 가축통계 1990, 1995, 2000, 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 5년간 변화율 추세가 2010, 2015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3.2.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의 전망

□ 영농형태별로는 논벼·채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화훼·특용작물·축산 등은 청장년 경영주 비중이 높음

- 전체적으로 50대 이하 청장년 경영주 비중은 2005년 39.6%에서 2015년 28.7%로 감소하는 반면, 70대 이상 고령자는 24.3%에서 34.6%로 증가할 전망이다.
 - '05년 농업기본통계에서 총농가 수는 1,273천호로 파악되었는데, 이 가운데 경영주 연령이 70세 이상인 농가는 31만호이며, 따라서 이들 고령농가 중에서 영농후계자 보유농가(약 10%)를 감안하더라도 약 27만호 정도는 농업경영체로 보기 어려움.
- 농업경영주의 연령 분포를 영농형태별로 보면, 2005년에 상대적으로 젊은 경영주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품목은 화훼, 축산, 특용작물, 과수, 채소, 논벼 등의 순임. 그러나 향후 10년 후인 2015년에는 화훼, 특용작물, 축산, 채소, 과수, 논벼 등의 순으로 다소 변화가 있음.
 - 논벼: 50대 이하 경영주 비율이 2005년 33.4%에서 2015년 22.2%로 감소, 70세 이상은 26.7%에서 41.1%로 증가
 - 과수: 50대 이하 경영주 비율이 2005년 47.1%에서 2015년 33.5%로 감소, 70세 이상은 18.8%에서 26.8%로 증가
 - 채소: 50대 이하 경영주 비율이 2005년 45.3%에서 2015년 34.0%로 감소, 70세 이상은 22.3%에서 29.5%로 증가
 - 특용작물: 50대 이하 경영주 비율이 2005년 52.5%에서 2015년 48.0%

- 로 감소, 70세 이상은 18.6%에서 21.5%로 증가
- 화훼: 50대 이하 경영주 비율이 2005년 74.8%에서 2015년 55.2%로 감소, 70세 이상은 5.5%에서 11.9%로 증가
 - 축산: 50대 이하 경영주 비율이 2005년 64.9%에서 2015년 39.9%로 감소, 70세 이상은 9.6%에서 19.3%로 증가

표 4-5. 경영주 연령별 · 영농형태별 농가 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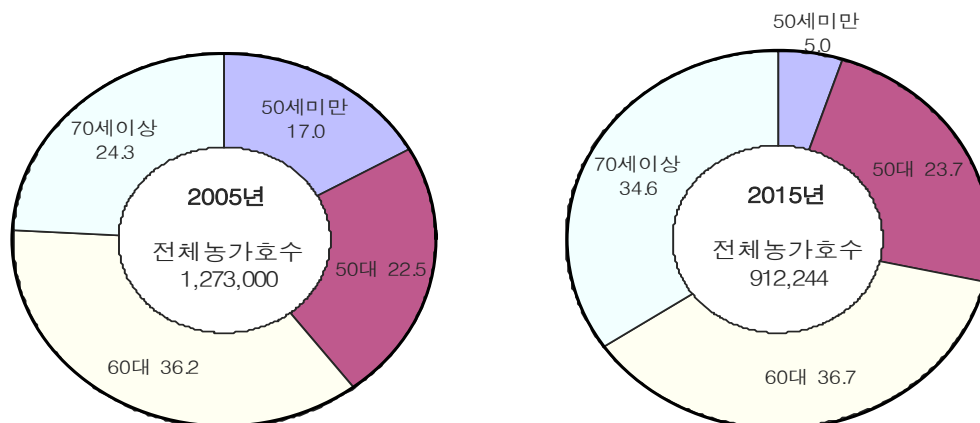
단위 : 천호, %

연 도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합 계
2005년	2 (0.1)	31 (2.5)	184 (14.4)	287 (22.5)	460 (36.2)	309 (24.3)	1,273 (100.0)
2015년	0.3 (0.0)	3 (0.3)	42 (4.6)	216 (23.7)	335 (36.7)	316 (34.6)	912 (100.0)

연 도	논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전작	축산	기타	합 계
2005년	648 (50.9)	146 (11.5)	230 (18.1)	27 (2.1)	10 (0.8)	125 (9.8)	83 (6.5)	4 (0.3)	1,273 (100.0)
2015년	446 (48.9)	124 (13.5)	186 (20.4)	20 (2.2)	7 (0.8)	68 (7.5)	58 (6.4)	3 (0.3)	912 (100.0)

자료: 농업총조사를 이용한 코호트 추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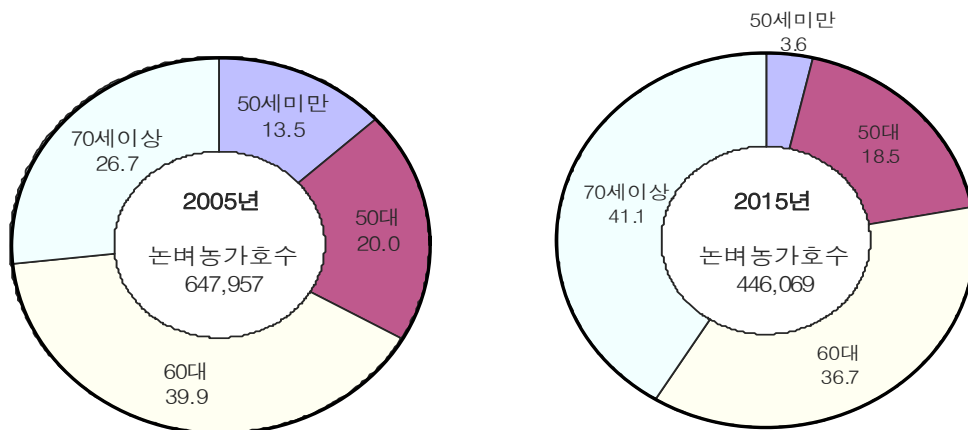
그림 4-5. 경영주 연령별 · 영농형태별 농가 수 전망



(1) 논벼 농가

- 경영주 연령별 논벼농가 수는 50세 미만과 50대의 비교적 젊은 층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70세 이상과 60대의 노년층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50세 미만의 감소와 70세 이상 경영주의 증가 속도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50세 미만 경영주는 13.5%, 50대의 경우 20.0% 수준에서 2015년 각각 3.6%, 18.5%로 감소함.
- 60세 이상 경영주는 2005년 66.6%에서 2015년 77.8%로 증가할 전망이다. 70세 이상의 경우 26.7%에서 41.1%로 14.4% 포인트 증가하여 전체 논벼농가의 4할 이상이 70세 이상의 고령 농가로 전망됨.

그림 4-6. 경영주 연령별 논벼농가 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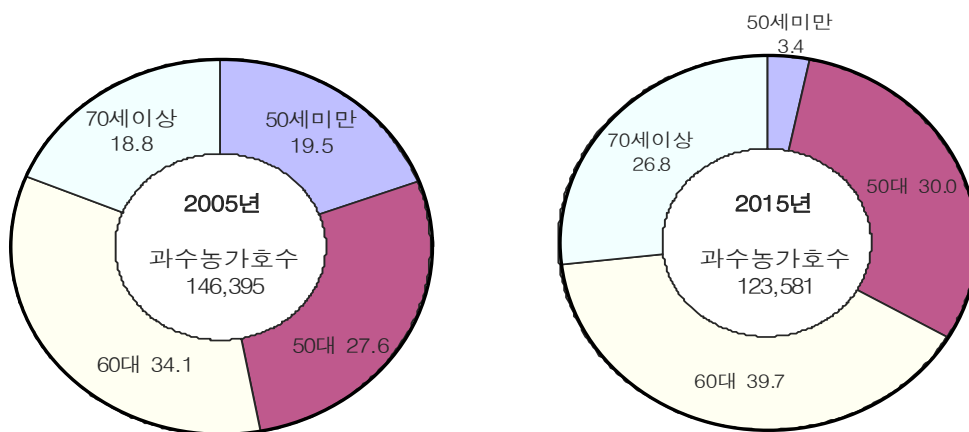


(2) 과수 농가

- 과수농가는 50세 미만 농가수의 감소와 70세 이상 농가수의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50대와 60대의 경우 2005년 대비 2015년에 소폭의 증가가 전망됨.

- 2005년 50세 미만 경영주는 19.5%, 70세 이상 경영주는 18.8%에서 2015년 각각 3.4%와 26.8%로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젊은 농가의 감소와 고령농가의 증가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 50대 경영주와 60대 경영주의 경우 2005년 각각 27.6%와 34.1%에서 2015년 30.0%와 39.7%로 소폭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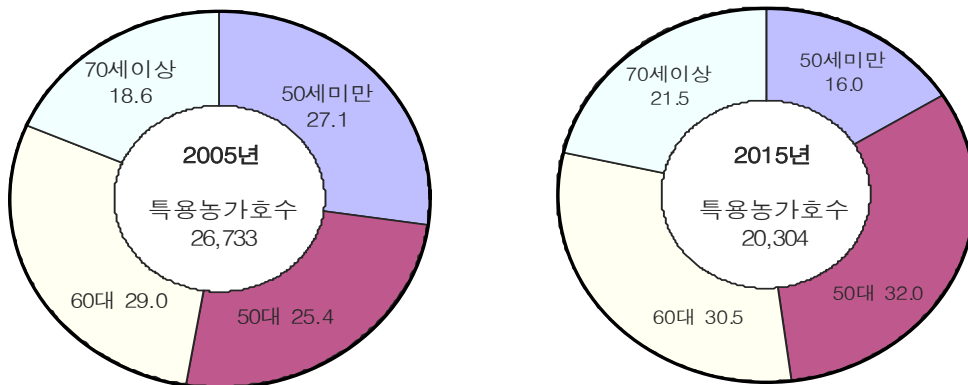
그림 4-7. 경영주 연령별 과수농가 수 전망



(3) 특용작물 농가

- 특용작물 농가는 50세 미만 농가수의 눈에 띄는 감소와 50대 경영주의 높은 비율증가가 큰 특징으로 나타남. 여타 영농형태에 비해 50세 미만 경영주 비율이 높은 특용작물 농가의 경우 2015년에 60세 이상의 비율은 소폭 증가한 반면 50세 미만의 감소와 50대의 증가가 두드러짐.
- 2005년 50세 미만 경영주는 27.1%, 50대 경영주는 25.4%에서 2015년 각각 16.0%, 32.0%로 전망됨.
- 70세 이상 경영주와 60대 경영주는 2005년에 각각 18.6%, 29.0%에서 2015년 21.5%, 30.5%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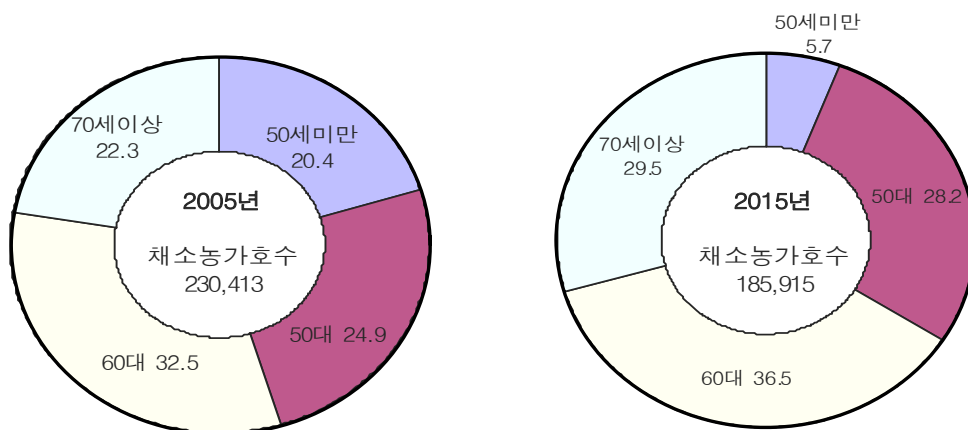
그림 4-8. 경영주 연령별 특용작물 농가 수 전망



(4) 채소 농가

- 채소농가는 50세 미만 농가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에 비해 50대 이상 농가수의 경우 꾸준한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4-9. 경영주 연령별 채소농가 수 전망



- 50세 미만 경영주는 2005년 20.4%에서 2015년 5.7%로 14.7%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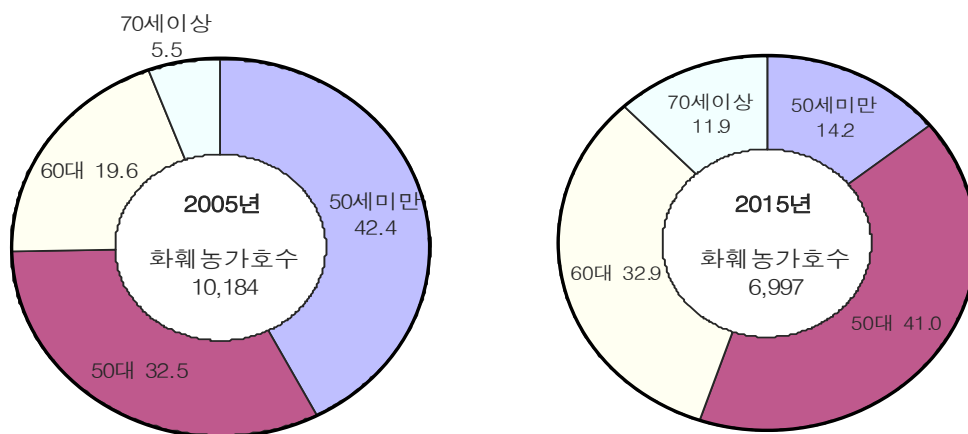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50대 경영주는 24.9%, 60대는 32.5%, 70세 이상은 22.3%에서 2015년 각각 28.2%, 36.5%, 29.5%로 3~7%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70세 이상 경영주의 증가가 클 것으로 전망됨.

(5) 화훼 농가

- 화훼농가는 2005년 4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50세 미만 경영주의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50대 이상 경영주의 경우 60대의 증가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됨.
- 50세 미만 경영주는 2005년 42.4%에서 2015년 14.2%로 28.2%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60대의 경우 19.6%에서 32.9%로 13.3%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4-10. 경영주 연령별 화훼농가 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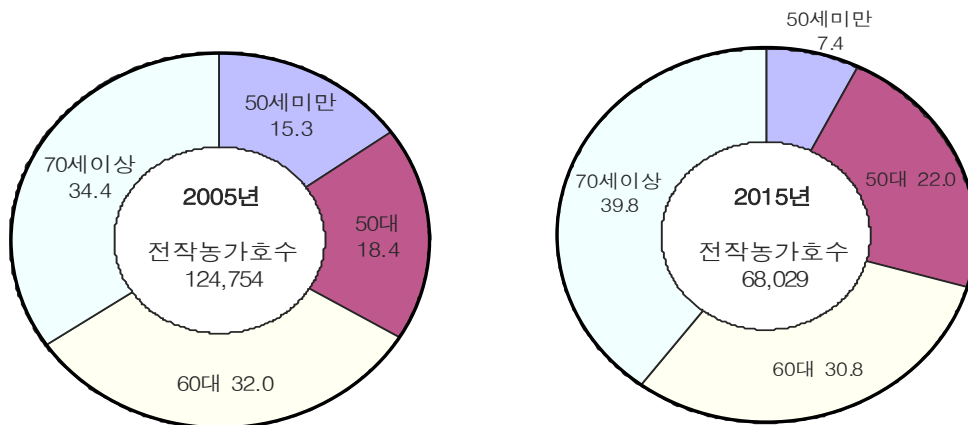
(6) 전작 농가

- 전작농가는 50세 미만 농가 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50대와 70세 이상 경영주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60대의 경우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50세 미만 경영주는 2005년 15.3%에서 2015년 7.4%로 2005년 대비 절반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50대 경영주는 18.4%, 70세 이상은 34.4%에서 2015년 각각 22.0%, 39.8%로 전망됨.

그림 4-11. 경영주 연령별 전작농가 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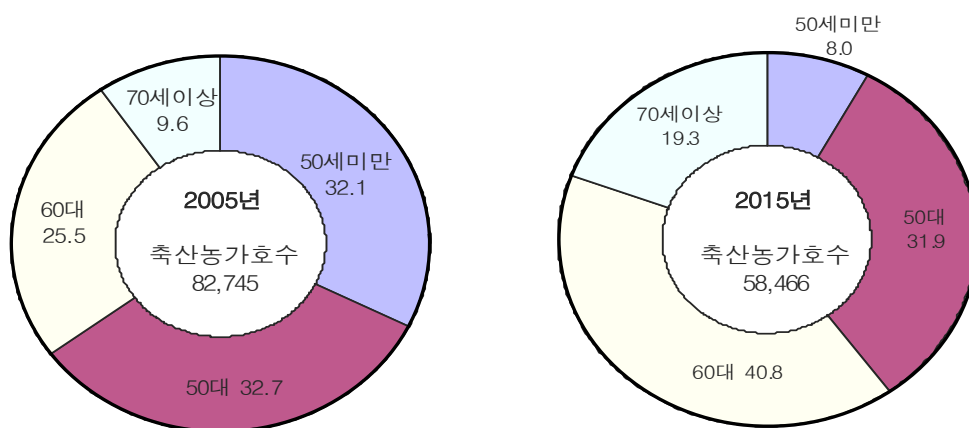


(7) 축산 농가

○ 축산농가는 50세 미만 경영주와 50대 경영주의 비중이 65% 가량으로 비교적 젊은 경영주의 비중이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2015년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반면 60대와 70세 이상 고령 경영주의 비중은 커질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50세 미만 경영주는 32.1%, 50대 경영주는 32.7%에서 2015년 각각 8.0%, 31.9%로 50세 미만 경영주의 감소가 클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60대 경영주는 25.5%, 70세 이상은 9.6%에서 2015년 각각 40.8%, 19.3%로 10~15%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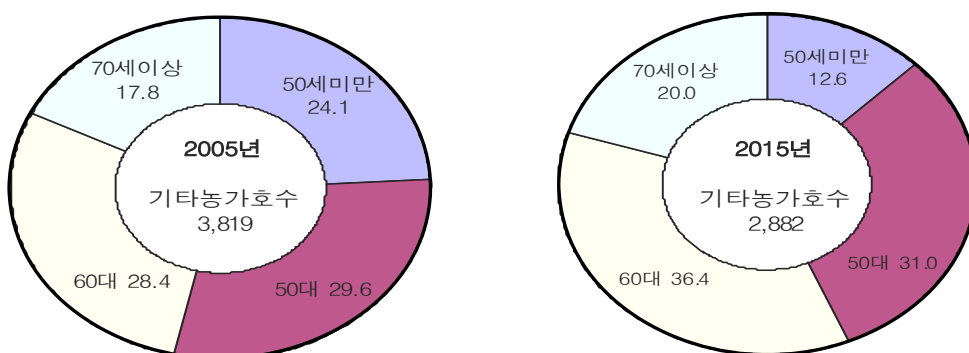
그림 4-12. 경영주 연령별 축산농가 수 전망



(8) 기타 농가

- 기타 농가는 50세 미만 경영주 수의 경우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으며, 50대 이상 경영주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50대 이상 경영주는 2005년에 각각 29.6%, 28.4%, 17.8%에서 2015년 31.0%, 36.4%, 20.0%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60대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4-13. 경영주 연령별 기타농가 수 전망



2.3. 영농형태별 대농경영의 전망

- 경영규모별로는 전업농 중심의 생산구조가 강화되어 2015년에는 10~15% 대농이 전체생산의 50% 이상을 점유할 전망
 - 경종농업은 대농의 생산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영세농은 자급적 영농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논 농가: 3ha 이상 대농층의 호수 비율이 2005년 5%에서 2015년 9% 수준으로 증가, 면적비율은 동기간 26%에서 37%까지 증가
 - 밭 농가: 2ha 이상 대농층은 호수 비율이 2005년 4%에서 2015년 6% 수준으로 증가, 면적비율은 동기간 30%에서 42% 수준까지 증가
 - 과수 농가: 1ha 이상 대농층은 호수 비율이 2005년 15%에서 2015년 16% 수준으로 증가, 면적 비율은 동기간 46%에서 49% 수준으로 증가
 - 시설원예: 2000평 이상 대농층은 호수 비율이 2005년 10%에서 2015년 8%수준으로 감소, 면적비율은 동기간 53%에서 56%로 증가
 - 축산은 기업적경영이 진전되어 대농 비중이 더욱 빠르게 높아질 전망이다.
 - 한우: 30두 이상 대농층은 호수 비율이 2005년 7%에서 2015년 14% 수준으로 증가, 사육두수 비율도 동기간 47%에서 59%로 증가
 - 낙농: 50두 이상 대농층은 호수 비율이 2005년 50%에서 2015년 74% 수준으로 증가, 사육두수 비율도 동기간 72%에서 92%까지 증가
 - 양돈: 2015년에는 1000두 이상 농가의 비중이 호수로는 42%, 사육두수로는 88%까지 증가할 전망
 - 양계: 2015년에는 3만수 이상 농가가 호수로는 2%를 차지하고 두수로는 82%를 점유할 전망

표 4-6. 주작목별 대농경영 농가 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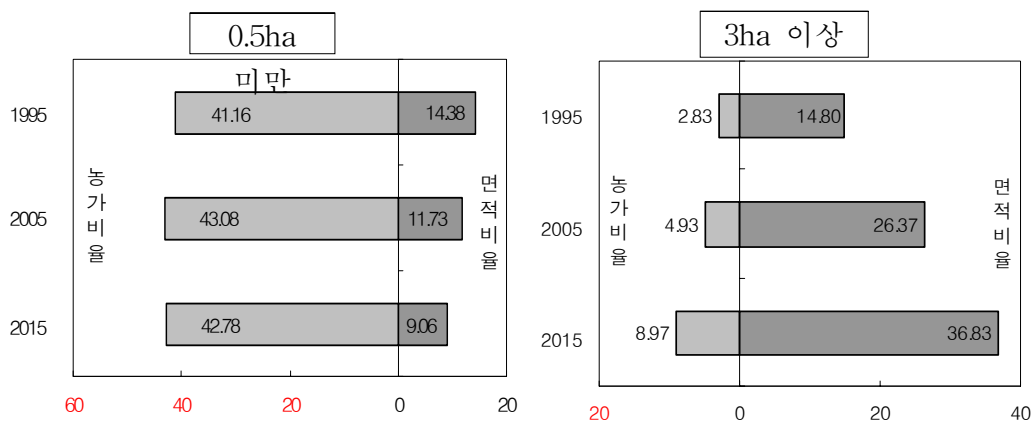
경영규모	2005		2015	
	호수비율	면적·두수비율	호수비율	면적·두수비율
논 3ha 이상	4.9	26.4	9.0	36.8
밭 2ha 이상	3.9	29.9	5.7	41.9
과수원 1ha 이상	14.6	45.8	15.7	48.7
시설 2천평 이상	9.6	52.9	7.5	56.1
한우 30두 이상	6.9	46.9	14.4	58.8
젖소 50두 이상	49.9	71.6	73.7	92.1
돼지 1000두 이상	24.0	77.9	42.4	88.2
닭 3만수 이상	1.1	73.7	2.2	82.3

자료: 농업총조사, 가축통계를 토대로 시산.

(1) 논 농가

- 논 농가의 대농 비중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속도가 가속화되어 2015년에는 3ha 이상 농가의 비중이 호수로는 9%, 면적으로는 37%를 차지할 전망이다.

그림 4-14. 논농가 수 및 면적비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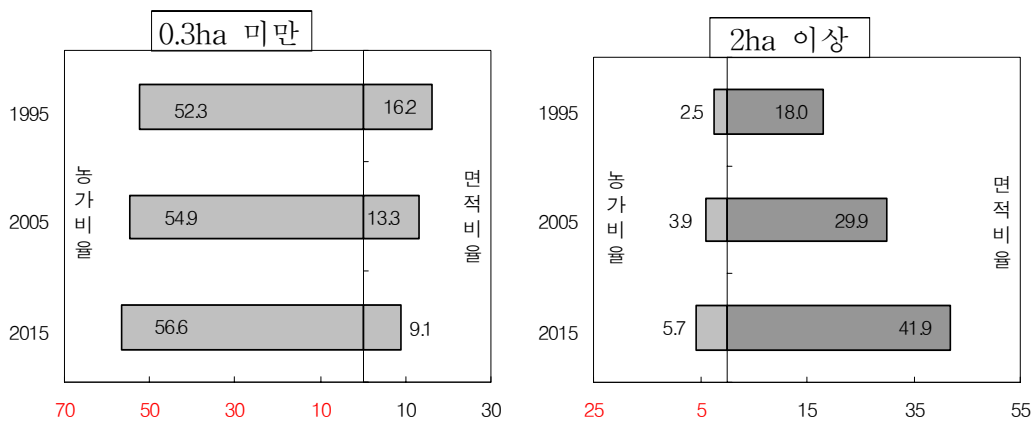


- 0.5ha 미만 영세농층은 농가 수로는 대략 4할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들 농가의 생산 비중은 2005년 12%에서 2015년 9%로 감소
- 3ha 이상 대농층은 호수 비율이 2005년 5%에서 2015년 9%수준으로 증가하고, 면적비율은 동기간 26%에서 37%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

(2) 밭 농가

- 밭 농가는 영세농 비중이 높은 편으로 0.3ha 이하 농가가 호수로 5할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규모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2015년에는 2ha 이상 농가가 호수로 6%, 면적으로는 42%를 차지할 전망이다.
- 0.3ha 미만 영세농층은 호수 비율이 2005년 55%에서 2015년 57%수준으로 증가하고, 면적비율은 동기간 13%에서 9%로 감소
- 2ha 이상 대농층은 호수 비율이 2005년 4%에서 2015년 6%수준으로 증가하고, 면적비율은 동기간 30%에서 42%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

그림 4-15. 밭농가 수 및 면적비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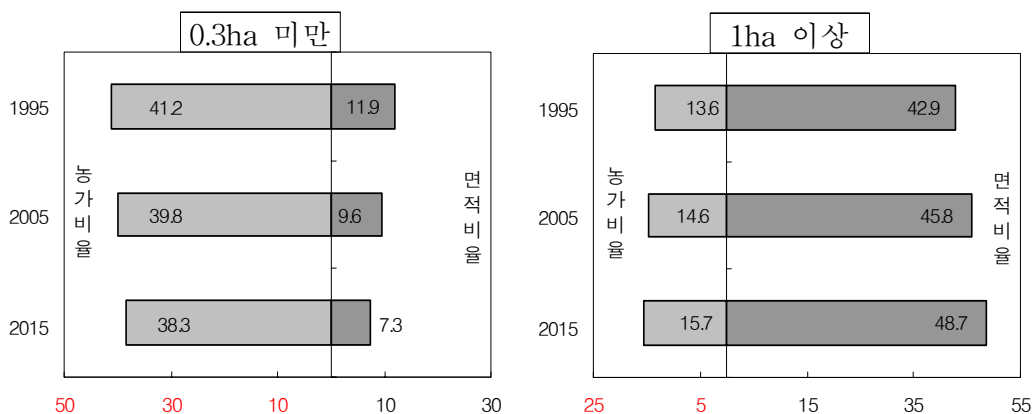
(3) 과수 농가

- 과수 농가는 영세농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0.3ha 이하 규모의 농가

비중이나 면적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반면 1ha 이상의 대농은 증가 추세로서 2015년에는 호수 비중이 16%, 면적 비중은 49%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0.3ha 미만 영세농층은 호수 비율이 2005년 40%에서 2015년 38%수준으로 감소하고, 면적 비율은 동기간 9%에서 7% 수준으로 감소
- 1ha 이상 대농층은 호수 비율이 2005년 15%에서 2015년 16% 수준으로 증가하고, 면적 비율은 동기간 46%에서 49%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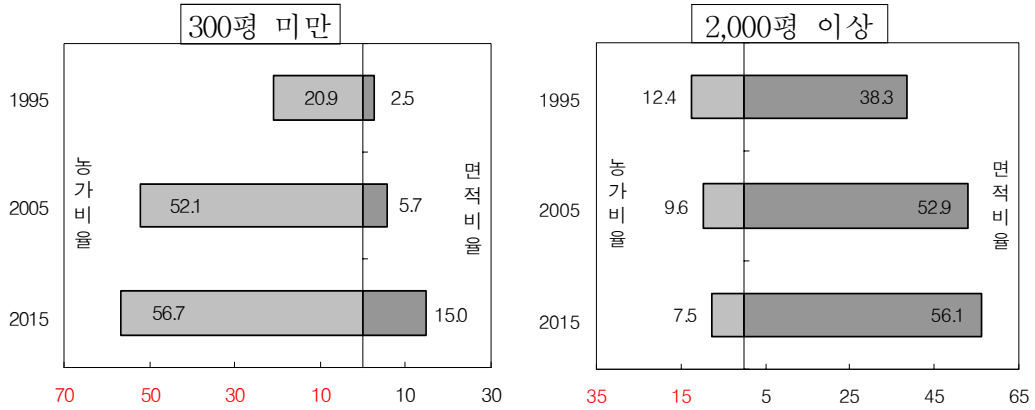
그림 4-16. 과수농가 수 및 면적비율 전망



(4) 시설원예 농가

- 시설원예는 소규모 시설이 창설됨으로써 소농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생산 비중으로는 2천평 이상의 대농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에는 약 8%의 농가가 56%의 생산을 점유할 전망이다.
- 300평 미만 영세농층은 호수 비율이 2005년 52%에서 2015년 57%수준으로 증가하고, 면적 비율은 동기간 6%에서 15% 수준으로 증가
- 2000평 이상 대농층은 호수 비율이 2005년 10%에서 2015년 8%수준으로 감소하는 반면, 면적비율은 동기간 53%에서 56%로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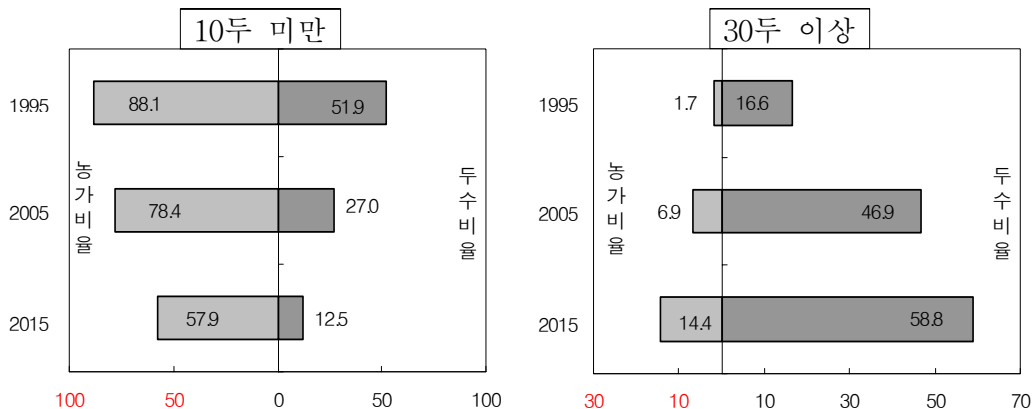
그림 4-17. 시설원에 농가 수 및 면적비율 전망



(5) 한우 농가

- 한우 경영은 기업적 축산이 진전되면서 소농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따라서 2015년에는 30두 이상 농가의 호수 비중이 14%, 사육두수 비중은 59%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4-18. 한우 농가 수 및 두수비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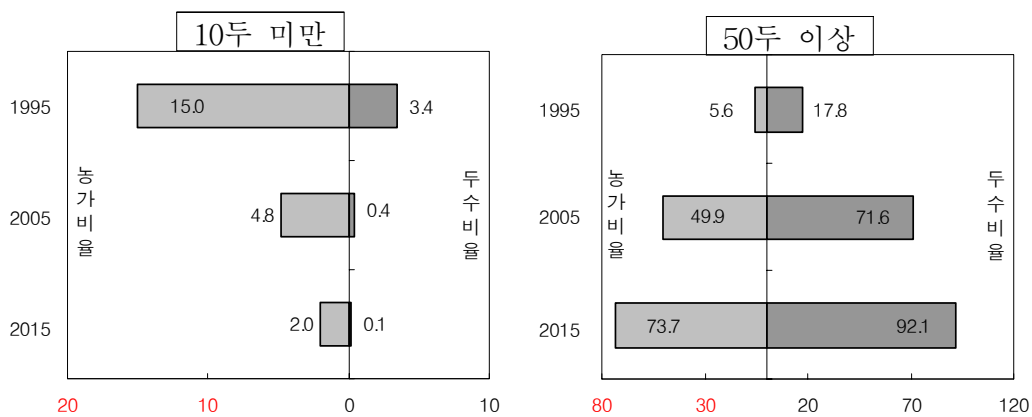
- 10두 미만 영세농층은 호수 비율이 2005년 78%에서 2015년 59% 수

- 준으로 감소하고, 사육두수 비율도 동기간 27%에서 13%로 감소
- 30두 이상 대농층은 호수 비율이 2005년 7%에서 2015년 14% 수준으로 증가하고, 사육두수 비율도 동기간 47%에서 59%로 증가 전망

(6) 낙농 농가

- 낙농 경영은 한우와 마찬가지로 기업적 축산이 진전되면서 소농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따라서 2015년에는 50두 이상 농가의 비중이 호수로는 74%, 사육두수로는 92%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50두 이상 대농층은 호수 비율이 2005년 50%에서 2015년 74% 수준으로 증가하고, 사육두수 비율도 동기간 72%에서 92%까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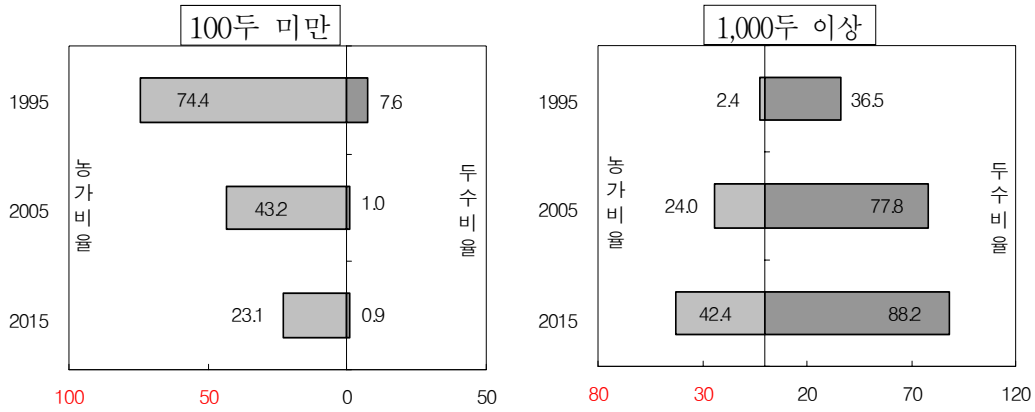
그림 4-19. 낙농 농가 수 및 두수비율 전망



(7) 양돈 농가

- 양돈 경영은 기업적 축산이 늘어나면서 농가의 소규모 사육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2005년 현재 100두 미만의 농가형 사육은 두수 비중이 1%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따라서 2015년에는 1000두 이상 농가의 비중이 호수로는 42%, 사육두수로는 88%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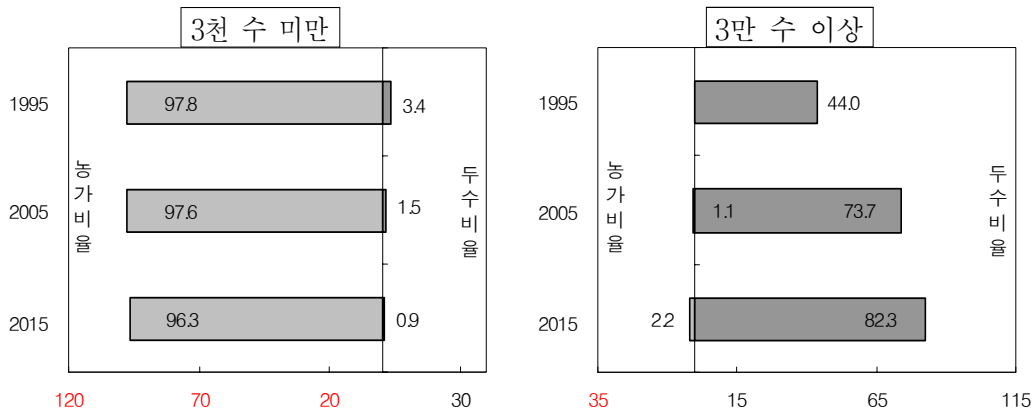
그림 4-20. 양돈 농가 수 및 두수비율 전망



(8) 양계 농가

- 양계 경영은 일찍이 기업적 축산이 대종을 이루어 농가의 소규모 사육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따라서 2015년에는 3만수 이상 농가가 호수로는 2%를 차지하고 두수로는 82%를 점유할 전망이다.

그림 4-21. 양계 농가 수 및 두수비율 전망



제 5 장

농업구조정책의 과제

1. 농업구조정책의 체계화

1.1. 농업구조 · 경영정책의 성격 재정립

- 첫째, 구조 · 경영정책은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함.
 - 시장 메카니즘에 맡겨 놓으면 완만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농업구조를 관련 정책수단에 의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그 성과를 얻기까지 10년 이상 또는 세대교체를 계기로 할 만큼의 장기간이 필요함. 더욱이 농업이 타산업과 대등한 생산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제도 개혁이 요구됨.
- 둘째, 사회적 저항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함.
 - 농업구조조정이란 궁극적으로 농지를 비롯한 고정적 생산요소를 재배분하거나 소득분배 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해 관계가 대립할 수밖에 없음. 특히 토지이용권의 조정에는 많은 영세농가의 이농과 탈농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업의 시행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며, 따라서 농촌사회에 내재한 전통적인 제도나 관습과 조화를 이루

는 정책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만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음.

- 셋째, 산업정책과 사회정책 등 관련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구조정책은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생산정책과 보완관계를 갖지만, 가격정책과는 상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특히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은 중소농을 온존시킴으로써 대농 층으로의 농지유동화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구조변화를 둔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짐. 따라서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서는 가격 억제정책을 채택해 온 것이 선진국들의 경험임.
- 넷째, 구조·경영정책은 경제정책으로서 동태적이어야 함.
 - 농업구조 문제는 국민경제의 발전과정에 대응하는 산업구조의 문제이고 또한 농업생산의 특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또는 시기에 따라서 정책수단의 내용을 달리함. 예를 들어 농업경영 발전 단계에 따라 외연적 규모확대와 내부적 경영개선이 시기를 달리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생산비 절감에 의한 가격 경쟁력과 상품성 제고를 통한 품질 경쟁력이 정책적으로 상호보완하면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임.

1.2. 농업구조·경영정책의 체계화

□ 농업의 기능을 분담하는 체계의 확립

- 농업의 국민경제적 기능은 국민의 식량공급, 국토자원 및 환경의 보전, 농촌인력의 고용과 소득기회 제공, 농촌사회의 규모와 기능 유지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및 농가 유형별로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야 함.
 - 예를 들어 식량안보 기능은 전업농가가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할 기능이며,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업농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지만, 진흥지역 밖의 겸업농가가 담당하게 되는 고용창출이나 농촌사회 유지 등의 역할도 중요함.

□ 다양한 경영주체를 육성하는 제도의 확립

- 우리 농업의 근간은 가족농(family farm)이며 앞으로도 가족농 체제가 유지될 것이지만, 농가 이외의 다양한 농업경영체가 서로 경쟁하면서 공존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함.
 - 상속농가의 후계자뿐만 아니라 신규 인력이 창업농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산업자본과 기술이 원활하게 농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기존에 '사람' 단위로 지원된 정책을 '경영' 단위로 전환하고 각종 정책자금을 종합자금으로 재편함으로써 경쟁을 통하여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업농에게 농지를 비롯한 자원이 집중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 생산조직을 적극 장려하고, 농업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체로서 중소기업 수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협업경영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가족농과 협력하는 보완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가 정비되어야 함.

□ 농가의 발전 단계별로 정책수단을 차별화하는 체계의 확립

-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농가의 발전유형별로 정책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강제적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농업인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전업농과 겸업농은 농업정책의 주된 대상으로서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이농·탈농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농외소득정책, 과도적 고령농가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책 등으로 정책수단을 차별화해야 함.

- 농업경영의 발전단계에 따른 정책프로그램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예를 들어 벼농사의 경영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전문화 → 전업화 → 기업화 등으로 경영형태의 변화를 수반하는데, 각각의 발전단계에 따라 정책 지원의 내용이 달라져야 함.

2. 농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전략

□ 농업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정부는 중장기적인 농업구조의 바람직한 모습을 상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경쟁제도와 지원시책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함. 농산물 가격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구조정책을 통해 경쟁력 있는 경영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요소(자원), 경영주체, 생산 품목 등을 재편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과 투융자 지원 등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생산요소 구조조정: 농지나 가축 등 자원의 규모경제를 도모
 - 농업경영체 구조조정: 경영능력이 우수한 경영체 육성
 - 생산품목 구조조정: 시장수요와 국제경쟁력 있는 품목 중심으로 생산구조 개편

□ 농업구조정책의 추진 방향

-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구조 전망에서도 분석되었듯이 향후 10년 후인 2015년의 우리나라 농업은 대략 90만호 농가가 33조원 정도의 총생산액을 실현하는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농업총소득은 대략 13조원 수준으로, 전업농 호당 평균 농업 소득을 4천만원(농가소득의 8할을 농업소득으로 상정)으로 가정할 때 약 30만호의 농가에 분배될 규모이며, 중소농의 몫까지 고려하면 전업농의 소득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총소득을 증대시키는 노력과 함께 전업농 중심의 농가구조 재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경영체가 영농규모를 확대하면서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함.
 - 농산물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업농은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총소득 증대를 도모해야 하며, 정부는 농지와 가축 등의 자원이 전업농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시장개방에 따른 소득 감소는 영세농보다는 전업농일수록 영향이 크므로 소득보험제도 등을 통해 경영안정을 지원해야 함.
- 농업경영의 은퇴제도를 확립하고, 농정 차원에서 고령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 각종 농업지원 시책에서 농업경영의 은퇴 연령(예: 65세)을 설정하고 농촌사회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아감.
 -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농업인연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실정에서는 고령농업인의 자연스런 은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준에서 고령 경영주가 유연하게 경영이양할 수 있도록 은퇴직불과 같은 사회보장대책을 강구해야 함.

참 고 문 헌

- 김정호, “농업구조의 쟁점과 진로”, 『한국농업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 김정호 외, 『1990·1995·2000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농림부,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5.
- 박진도, “농업구조 동향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농업경제연구』 제39권 제1호, 한국농업경제학회, 1998.
- 박현출, “농업부문의 구조조정 전략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제출논문), 2004.
- 설광언, 『농업구조 전망과 농정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94.
- 신기엽, 『농업구조 변화와 농업인력대책』, 농협중앙회 조사부, 2001.
- 이영기, 『한국 농업의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 이정환, 『농업의 구조전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 Patel, R. & Memarsadeghi S., *Agricultural Restructuring and Concentration in the United States: who wins, who loses?*, Policy Brief No.6 Foodfirst, 2003. 8
- MacDonald, J., Hoppe, R., Banker, D., *The Evolution of Structural Change in the U.S. Farm Sector*, IATRC Summer Symposium, Adjusting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Agricultural Policy Reform in Industrial Countries, 2004. 6.
- Qualman, D. & Wiebe, N., *The Structural Adjustment of Canadian Agriculture*,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2002. 11.
- 頼平編, 『農業政策の基礎理論』, 家の光協會, 1987.
- 富民協會, 『農業と經濟』, 2004年 6月.

부록1: 농업구조 주요지표 전망

□ 농가호수(천호)

	기준전망(A)	한미FTA(B)	DDA개도국(C)	(A-B)	(A-C)
1995	1,501	-	-	-	-
2000	1,383	-	-	-	-
2005	1,273	1,273	1,273	0	0
2008	1,127	1,127	1,127	0	0
2009	1,098	1,098	1,098	0	0
2010	1,069	1,068	1,069	1	-1
2011	1,039	1,037	1,040	2	-1
2012	1,010	1,004	1,011	5	-1
2013	978	970	979	9	-1
2014	940	923	939	17	1
2015	912	890	908	22	4
2016	882	853	874	29	7
2017	851	818	842	33	10

□ 농가인구(천명)

	기준전망(A)	한미FTA(B)	DDA개도국(C)	(A-B)	(A-C)
1995	4,851	-	-	-	-
2000	4,031	-	-	-	-
2005	3,433	3,433	3,433	0	0
2008	2,935	2,935	2,935	0	0
2009	2,824	2,822	2,824	3	0
2010	2,714	2,711	2,720	3	-6
2011	2,612	2,596	2,617	16	-5
2012	2,513	2,490	2,519	24	-6
2013	2,384	2,332	2,382	52	2
2014	2,300	2,238	2,291	62	9
2015	2,210	2,130	2,191	79	19
2016	2,123	2,034	2,100	89	23
2017	2,040	1,942	2,011	98	29

□ 농림업취업자(천명)

	기준전망(A)	한미FTA(B)	DDA개도국(C)	(A-B)	(A-C)
1995	2,289	-	-	-	-
2000	2,162	-	-	-	-
2005	1,747	1,747	1,747	0	0
2008	1,465	1,464	1,465	1	0
2009	1,403	1,406	1,403	-3	0
2010	1,344	1,350	1,354	-7	-10
2011	1,287	1,288	1,300	0	-13
2012	1,227	1,217	1,242	10	-14
2013	1,176	1,154	1,187	22	-11
2014	1,127	1,097	1,135	30	-8
2015	1,079	1,041	1,084	39	-4
2016	1,032	988	1,000	44	32
2017	986	936	950	50	37

□ 총경지면적(천ha)

	기준전망(A)	한미FTA(B)	DDA개도국(C)	(A-B)	(A-C)
1995	1,985	-	-	-	-
2000	1,889	-	-	-	-
2005	1,824	1,824	1,824	0	0
2008	1,771	1,771	1,771	0	0
2009	1,747	1,749	1,747	-2	0
2010	1,722	1,728	1,722	-6	0
2011	1,698	1,704	1,699	-6	-1
2012	1,673	1,679	1,675	-5	-2
2013	1,650	1,653	1,653	-4	-4
2014	1,628	1,624	1,626	4	1
2015	1,605	1,591	1,604	14	1
2016	1,580	1,560	1,578	20	2
2017	1,555	1,526	1,550	29	5

□ 총재배면적(천ha)

	기준전망(A)	한미FTA(B)	DDA개도국(C)	(A-B)	(A-C)
1995	2,197	-	-	-	-
2000	2,098	-	-	-	-
2005	1,924	1,924	1,924	0	0
2008	1,868	1,867	1,868	1	0
2009	1,836	1,839	1,836	-3	0
2010	1,804	1,812	1,805	-8	-1
2011	1,771	1,788	1,776	-17	-5
2012	1,740	1,760	1,748	-20	-8
2013	1,709	1,734	1,720	-25	-12
2014	1,677	1,703	1,688	-26	-11
2015	1,646	1,671	1,660	-24	-13
2016	1,613	1,639	1,627	-26	-13
2017	1,580	1,605	1,594	-24	-14

□ 쌀면적(천ha)

	기준전망(A)	한미FTA(B)	DDA개도국(C)	(A-B)	(A-C)
1995	1,056	-	-	-	-
2000	1,072	-	-	-	-
2005	980	980	980	0	0
2008	933	933	933	0	0
2009	915	924	915	-9	0
2010	897	917	898	-20	-1
2011	877	911	883	-34	-6
2012	858	902	869	-44	-11
2013	839	893	855	-54	-16
2014	819	879	836	-60	-17
2015	800	867	821	-67	-21
2016	780	858	804	-78	-24
2017	759	849	787	-90	-28

□ 쌀제외면적(천ha)

	기준전망(A)	한미FTA(B)	DDA개도국(C)	(A-B)	(A-C)
1995	1,141	-	-	-	-
2000	1,026	-	-	-	-
2005	944	944	944	0	0
2008	935	934	935	1	0
2009	921	914	921	7	0
2010	907	895	907	11	0
2011	894	877	893	17	1
2012	882	858	879	24	3
2013	870	841	866	30	4
2014	858	824	852	34	6
2015	846	804	838	42	8
2016	834	781	823	53	11
2017	821	755	808	66	13

□ 농가소득(천원)

	기준전망(A)	한미FTA(B)	DDA개도국(C)	(A-B)	(A-C)
1995	21,803	-	-	-	-
2000	23,072	-	-	-	-
2005	30,952	30,952	30,952	0	0
2008	33,240	33,161	33,240	79	0
2009	34,205	34,064	34,205	141	0
2010	35,238	34,931	35,215	308	23
2011	36,322	35,872	36,280	450	41
2012	36,817	35,953	36,656	864	162
2013	37,967	36,828	37,648	1,139	319
2014	39,298	37,875	38,772	1,423	526
2015	40,520	38,781	39,797	1,739	724
2016	41,846	39,860	40,970	1,986	876
2017	43,182	40,960	42,172	2,221	1,010

□ 농업총소득(10억원)

	기준전망(A)	한미FTA(B)	DDA개도국(C)	(A-B)	(A-C)
1995	15,714	-	-	-	-
2000	15,076	-	-	-	-
2005	15,612	15,612	15,612	0	0
2008	14,349	14,260	14,349	89	0
2009	14,284	14,126	14,284	159	0
2010	14,244	13,901	14,228	343	17
2011	14,197	13,708	14,169	490	28
2012	13,513	12,579	13,361	935	152
2013	13,419	12,202	13,118	1,217	301
2014	13,341	11,790	12,825	1,551	517
2015	13,237	11,384	12,522	1,853	715
2016	13,130	11,024	12,264	2,105	865
2017	12,966	10,656	11,985	2,310	981

□ 농업생산액(10억원)

	기준전망(A)	한미FTA(B)	DDA개도국(C)	(A-B)	(A-C)
1995	26,602	-	-	-	-
2000	31,968	-	-	-	-
2005	35,089	35,089	35,089	0	0
2008	33,731	33,681	33,731	49	0
2009	33,651	33,585	33,651	66	0
2010	33,641	33,341	33,754	300	-114
2011	33,629	33,105	33,769	523	-140
2012	33,048	31,957	33,052	1,091	-4
2013	33,062	31,598	32,905	1,464	157
2014	33,103	31,209	32,700	1,894	403
2015	33,059	30,761	32,109	2,297	949
2016	33,027	30,366	31,865	2,660	1,162
2017	32,939	29,939	31,603	3,000	1,336

□ 쌀생산액(10억원)

	기준전망(A)	한미FTA(B)	DDA개도국(C)	(A-B)	(A-C)
1995	6,760	-	-	-	-
2000	10,505	-	-	-	-
2005	8,537	8,537	8,537	0	0
2008	6,941	6,999	6,941	-58	0
2009	6,669	6,859	6,669	-191	0
2010	6,411	6,629	6,566	-218	-156
2011	6,147	6,410	6,373	-262	-226
2012	5,904	6,135	6,154	-232	-251
2013	5,668	5,919	5,939	-252	-271
2014	5,436	5,651	5,694	-215	-258
2015	5,201	5,413	5,090	-212	111
2016	4,958	5,198	4,818	-240	139
2017	4,726	4,987	4,562	-261	164

□ 채소류생산액(10억원)

	기준전망(A)	한미FTA(B)	DDA개도국(C)	(A-B)	(A-C)
1995	6,939	-	-	-	-
2000	6,739	-	-	-	-
2005	6,919	6,919	6,919	0	0
2008	6,946	6,940	6,946	6	0
2009	6,842	6,804	6,842	39	0
2010	6,783	6,590	6,778	193	5
2011	6,772	6,408	6,770	364	2
2012	6,811	6,303	6,772	508	39
2013	6,858	6,221	6,759	637	99
2014	6,875	6,116	6,656	759	219
2015	6,881	5,965	6,571	917	310
2016	6,867	5,804	6,470	1,063	397
2017	6,840	5,645	6,364	1,196	477

□ 과실류생산액(10억원)

	기준전망(A)	한미FTA(B)	DDA개도국(C)	(A-B)	(A-C)
1995	3,286	-	-	-	-
2000	2,581	-	-	-	-
2005	3,082	3,082	3,082	0	0
2008	2,995	2,997	2,995	-2	0
2009	3,060	3,064	3,060	-4	0
2010	3,150	3,158	3,151	-8	-1
2011	3,232	3,244	3,233	-13	-1
2012	2,601	2,296	2,515	304	86
2013	2,612	2,125	2,437	486	175
2014	2,669	2,005	2,406	664	263
2015	2,680	1,866	2,356	813	323
2016	2,722	1,764	2,333	958	389
2017	2,700	1,640	2,273	1,060	427

□ 축산생산액(10억원)

	기준전망(A)	한미FTA(B)	DDA개도국(C)	(A-B)	(A-C)
1995	5,961	-	-	-	-
2000	8,082	-	-	-	-
2005	11,767	11,767	11,767	0	0
2008	11,990	11,945	11,990	45	0
2009	12,185	12,090	12,185	95	0
2010	12,365	12,221	12,359	145	7
2011	12,566	12,372	12,552	194	15
2012	12,822	12,602	12,806	220	15
2013	13,034	12,779	13,019	255	14
2014	13,249	12,946	13,238	302	11
2015	13,441	13,086	13,430	355	11
2016	13,642	13,230	13,632	412	10
2017	13,852	13,356	13,837	496	15

부록2: 경영주 연령별 농가수 전망

- 1990, 1995, 2000년도 농업총조사를 이용하여 코호트분석법(Cohort component method)으로 추정함.
 - 코호트분석법은 5년단위 연령계층의 변화율을 축차적으로 적용하는 추정방법이며, 농업경영주의 진출입률은 1990~2000년 추세를 적용하고, 사망률 등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를 이용함.

□ 전체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29세 이하	1,691	0.1	515	0.0	305	0.0
30-39세	31,375	2.5	10,219	1.0	2,959	0.3
40-49세	183,808	14.4	98,546	9.2	42,203	4.6
50-59세	286,616	22.5	244,970	22.9	216,222	23.7
60-69세	460,413	36.2	359,490	33.6	334,944	36.7
70세 이상	309,097	24.3	354,811	33.2	315,611	34.6
합 계	1,273,000	100.0	1,068,552	100.0	912,244	100.0
65세 이상	572,515	45.0	556,338	52.1	500,667	54.9

□ 논벼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29세 이하	665	0.1	175	0.0	72	0.0
30-39세	12,592	1.9	3,978	0.7	914	0.2
40-49세	73,955	11.4	38,667	6.8	15,292	3.4
50-59세	129,488	20.0	105,564	18.5	82,720	18.5
60-69세	258,413	39.9	200,486	35.2	163,601	36.7
70세 이상	172,844	26.7	221,489	38.8	183,470	41.1
합 계	647,957	100.0	570,359	100.0	446,069	100.0
65세 이상	326,303	50.4	341,592	59.9	280,945	63.0

□ 과수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29세 이하	73	0.0	22	0.0	9	0.0
30-39세	2,652	1.8	546	0.4	80	0.1
40-49세	25,803	17.6	13,946	10.8	4,149	3.4
50-59세	40,352	27.6	37,193	28.8	37,126	30.0
60-69세	49,968	34.1	45,098	34.9	49,067	39.7
70세 이상	27,546	18.8	32,534	25.2	33,150	26.8
합 계	146,395	100.0	129,339	100.0	123,581	100.0
65세 이상	53,929	36.8	55,232	42.7	58,565	47.4

□ 특용작물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29세 이하	30	0.1	0	0.0	0	0.0
30-39세	1,518	5.7	786	3.3	155	0.8
40-49세	5,695	21.3	4,464	18.8	3,094	15.2
50-59세	6,782	25.4	7,192	30.3	6,502	32.0
60-69세	7,739	29.0	6,105	25.7	6,192	30.5
70세 이상	4,969	18.6	5,186	21.9	4,361	21.5
합 계	26,733	100.0	23,733	100.0	20,304	100.0
65세 이상	9,117	34.1	8,300	35.0	7,472	36.8

□ 채소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29세 이하	540	0.2	141	0.1	82	0.0
30-39세	6,299	2.7	1,906	0.9	794	0.4
40-49세	40,112	17.4	23,354	11.6	9,786	5.3
50-59세	57,377	24.9	54,165	26.8	52,490	28.2
60-69세	74,784	32.5	64,276	31.8	67,928	36.5
70세 이상	51,302	22.3	58,323	28.8	54,835	29.5
합 계	230,413	100.0	202,166	100.0	185,915	100.0
65세 이상	92,308	40.1	91,690	45.4	89,947	48.4

□ 화훼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29세 이하	15	0.1	0	0.0	0	0.0
30-39세	898	8.8	224	3.1	34	0.5
40-49세	3,403	33.4	1,770	24.7	963	13.8
50-59세	3,305	32.5	2,762	38.6	2,866	41.0
60-69세	1,999	19.6	1,761	24.6	2,301	32.9
70세 이상	563	5.5	647	9.0	835	11.9
합 계	10,184	100.0	7,164	100.0	6,997	100.0
65세 이상	1,485	14.6	1,450	20.2	1,894	27.1

□ 전작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29세 이하	152	0.1	73	0.1	54	0.1
30-39세	3,953	3.2	1,309	1.8	415	0.6
40-49세	14,957	12.0	6,873	9.5	4,537	6.7
50-59세	22,900	18.4	15,384	21.3	14,980	22.0
60-69세	39,878	32.0	21,552	29.8	20,966	30.8
70세 이상	42,914	34.4	27,095	37.5	27,078	39.8
합 계	124,754	100.0	72,286	100.0	68,029	100.0
65세 이상	66,123	53.0	39,310	54.4	38,074	56.0

□ 축산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29세 이하	246	0.3	103	0.2	88	0.2
30-39세	4,165	5.0	1,341	2.2	534	0.9
40-49세	22,179	26.8	9,027	15.0	4,052	6.9
50-59세	27,096	32.7	21,649	35.9	18,644	31.9
60-69세	21,090	25.5	19,242	31.9	23,841	40.8
70세 이상	7,969	9.6	8,931	14.8	11,308	19.3
합 계	82,745	100.0	60,292	100.0	58,466	100.0
65세 이상	17,753	21.5	17,716	29.4	22,745	38.9

□ 기타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실수(호)	비율(%)
29세 이하	8	0.2	0	0.0	0	0.0
30-39세	212	5.5	130	4.1	33	1.1
40-49세	702	18.4	445	13.9	330	11.5
50-59세	1,130	29.6	1,062	33.0	894	31.0
60-69세	1,086	28.4	970	30.2	1,049	36.4
70세 이상	681	17.8	606	18.9	575	20.0
합 계	3,819	100.0	3,212	100.0	2,882	100.0
65세 이상	1,197	31.3	1,048	32.6	1,025	35.6

부록3: 영농규모별 생산비중 전망

- 1990, 1995, 2000년도 농업총조사 및 가축통계를 이용하여 경영규모 계층별 농가비율의 추이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추정함.
 - 경종농업은 농업총조사 1990, 1995, 2000년 결과를 이용하여 과거 5년간 변화율 추세가 2010, 2015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 축산은 가축통계 1990, 1995, 2000, 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 5년간 변화율 추세가 2010, 2015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 논

단위 : %

구 분	0.5ha 미만		0.5-3ha		3ha 이상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1990	40.36	15.74	58.46	78.08	1.17	6.19
1995	41.16	14.38	56.02	70.82	2.83	14.80
2000	42.25	13.75	53.97	66.21	3.79	20.04
2005	43.08	11.73	51.99	61.90	4.93	26.37
2010	43.26	10.52	50.08	57.88	6.66	31.60
2015	42.78	9.06	48.25	54.11	8.97	36.83

□ 밭

단위 : %

구 분	0.3ha 미만		0.3-2ha		2ha 이상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1990	56.03	19.95	42.41	67.45	1.56	12.59
1995	52.33	16.21	45.15	65.81	2.52	17.98
2000	53.68	14.90	43.16	61.14	3.16	23.95
2005	54.86	13.27	41.26	56.81	3.89	29.93
2010	55.85	11.32	39.44	52.78	4.71	35.90
2015	56.63	9.09	37.70	49.04	5.67	41.87

□ 과수

단위 : %

구 분	0.3ha 미만		0.3-1ha		1ha 이상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1990	47.98	15.41	41.53	46.34	10.49	38.25
1995	41.21	11.90	45.20	45.23	13.58	42.87
2000	40.51	10.77	45.40	44.91	14.09	44.33
2005	39.79	9.63	45.60	44.59	14.61	45.78
2010	39.06	8.49	45.80	44.27	15.15	47.24
2015	38.32	7.34	46.00	43.96	15.69	48.70

□ 시설원예

단위 : %

구 분	300평 미만		300-2000평		2000평 이상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1990	24.78	4.00	69.07	70.50	6.15	25.53
1995	20.87	2.48	66.78	59.21	12.35	38.31
2000	49.94	3.45	39.56	49.49	10.50	47.06
2005	52.15	5.72	38.24	41.37	9.61	52.91
2010	54.01	11.13	36.97	34.59	9.02	54.29
2015	56.74	14.97	35.74	28.91	7.53	56.11

□ 한우

단위 : %

구 분	10두 미만		10-29두		30두 이상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1990	96.21	72.11	3.31	18.00	0.47	9.89
1995	88.08	51.86	10.25	31.49	1.67	16.64
2000	88.64	39.44	8.27	24.12	3.09	36.44
2005	78.38	26.96	14.75	26.13	6.87	46.90
2010	69.29	18.32	21.23	27.31	9.47	54.37
2015	57.85	12.49	27.72	28.67	14.43	58.84

□ 낙농

단위 : %

	10두 미만		10-49두		50두 이상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1990	38.87	14.49	59.15	74.11	1.98	11.40
1995	14.99	3.45	79.38	78.76	5.63	17.79
2000	6.20	0.75	65.83	48.84	27.97	50.41
2005	4.81	0.45	45.32	27.92	49.87	71.64
2010	3.41	0.18	34.81	16.96	61.78	82.86
2015	2.02	0.14	24.30	7.77	73.68	92.09

□ 양돈

단위 : %

구 분	100두 미만		100-999두		1000두 이상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1990	93.43	23.83	6.27	52.91	0.30	23.26
1995	74.38	7.56	23.19	55.92	2.43	36.53
2000	58.19	2.43	31.99	37.39	9.82	60.18
2005	43.16	1.02	32.83	21.13	24.01	77.85
2010	31.52	1.02	33.67	16.46	34.80	82.52
2015	23.08	0.86	34.51	10.95	42.40	88.19

□ 양계

단위 : %

구 분	3천 수 미만		3천~3만 수		3만 수 이상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1990	96.50	4.59	3.31	65.50	0.19	29.92
1995	97.78	3.38	1.88	52.66	0.34	43.96
2000	98.17	2.27	1.31	37.64	0.52	60.09
2005	97.56	1.46	1.37	24.80	1.06	73.74
2010	97.14	1.17	1.44	20.34	1.42	78.48
2015	96.34	0.95	1.51	16.77	2.15	82.28

부록4: 일본 농업의 FTA 영향 예측(번역자료)

이 자료는 일본 富民協會에서 발간한 『農業と經濟』 2004년 8월호에서 세 편의 논단을 번역(번역자: 이두순 박사)하여 발췌한 것임.

아시아의 FTA와 일본의 수도작

키타데 도시아키(北出俊昭, 明治대 농학부 교수)

1. 아시아의 쌀 생산과 특징

- 아시아의 쌀 생산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첫째, 세계에서 차지하는 아시아의 쌀 생산의 지위가 크며, 수확면적의 약 90%, 생산량으로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아시아 이외에서는 미국, 브라질, 이집트, 나이제리아 등 수 개국에 불과함. 결국 쌀은 몬순 기후에 적합한 아시아의 농산물인 것임.
 - 둘째, 아시아 32개국 중 10개국에서 수확면적, 생산량 모두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국 쌀은 아시아의 농산물이라고 해도 실재는 이 10개국의 농산물임. 또한 쌀 주 생산국 가운데에서도 쌀 생산량이나 생산성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셋째,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무역과의 관계임. 이 10개국 가운데에서도 쌀 수출능력이 있는 나라는 태국, 인도, 중국 등 수개국에 불과함. 그 결과 현재 세계 쌀 생산량은 약 6억 톤(조곡)으로 밀, 옥수수와의 그다지 차이가 없음. 그러나 생산량 중 무역량의 비율(무역비율)은 7% 정도로서 밀의 19%, 옥수수 13%에 비해 현저히 낮음.
- 국제무역에서 보면 쌀은 자급적인 농산물임. 근본적으로 아시아의 수도작은 자급을 목적으로 소규모 농가가 담당하고 있고, 상품화율이 낮은 것이 특징임.

<표 1> 세계 쌀 생산에서 차지하는 아시아의 지위

	수확면적(천ha)				생산량(천M/T)			
	1989~91	2000	2001	2002	1989~91	2000	2001	2002
세계 합계	147,484	153,858	151,232	147,144	516,937	602,605	597,787	576,280
아시아 합계	132,201	137,966	135,838	130,820	474,100	549,271	544,677	523,030
방글라데시	10,386	10,801	10,661	11,059	26,980	37,628	36,269	38,134
중국	33,238	60,301	29,144	28,177	186,598	189,814	179,305	176,553
인도	42,501	44,712	44,622	40,000	111,290	131,614	139,735	116,580
인도네시아	10,438	11,793	11,500	11,641	44,864	51,898	50,461	51,604
한국	1,236	1,072	1,083	1,053	7,705	7,125	7,453	6,650
미얀마	4,689	6,302	6,200	6,200	13,661	21,324	21,900	21,900
필리핀	3,414	4,038	4,065	4,046	9,672	12,389	12,955	13,271
타이	9,241	9,761	9,990	9,990	19,398	25,608	26,954	25,945
베트남	6,086	7,666	7,485	7,485	19,281	32,530	31,970	34,064
일본	2,073	1,770	1,736	1,688	12,688	11,863	11,320	11,111
아시아 비율 (%)	89.6	89.7	89.8	88.9	91.7	91.1	91.1	90.8

자료: 'FAO Production Yearbook' vol. 56-2002

주: 이 통계에서 아시아는 32개국임.

2. 주요국의 쌀 수급과 생산비 - 일본과 중국·한국·타이의 비교

- 쌀 수급에 관한 사항으로, <표 2>에서 최근 3개년 동향을 보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쌀 생산국으로 당연히 수출을 하고 있지만, 매년 수입도 하고 있음. 한편 한국은 국내 생산량과 수요량이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일정한 량을 수입하고 있고, 태국은 완전한 쌀 수출국임. 일본은 쌀을 수입하면서 동시에 원조미 등으로 수출도 하고 있음.
- 쌀의 수급사정은 각국에 따라 다르지만, 각국 국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중국은 본래 인디카 쌀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의 양질미 지향이 반영되어 자포니카 쌀 재배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동북부에서는 이런

경향이 강해서 일본에서 도입한 품종을 기초로 독자적인 품종이 개발되어 양질미 생산이 진척되고 있으며, 이 쌀은 주로 일본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재배되고 있다고 함.

<표 2> 주요국의 쌀 수급 동향

단위: 천톤

	중국			한국			태국			일본		
	1999	2000	2001	1999	2001	2002	2000-1	2000-2	2000-3	2000	2001	2002
국내 생산	205,645	194,778	183,994	8,097	8,140	8,485	25,844	26,523	26,057	9,490	9,057	8,889
수입	906	969	1,068	165	334	237	-	-	-	879	786	882
국내 수요	197,080	195,418	188,515	7,868	7,925	8,549	14,172	15,049	15,338	9,988	9,638	9,459
수출	4,375	4,748	3,245	-	-	-	11,253	11,636	10,538	462	603	222

자료: 일본은 '식량수급표', 중국은 FAO Food Balance Sheet, 한국과 태국은 정부 통계
 주: 중국, 한국, 태국은 조곡, 일본은 현미이다. 단 중국, 한국은 정곡을 조곡으로 환산.
 조곡 대 정곡 환산율은 1:0.65로 함.

- 한국에서도 같은 경향이 지적됨. 쌀 부족 시기에 재배가 장려되었던 다수성 품종인 인디카 계통의 '통일쌀'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감소하고, 양질미인 자포니카 계통의 '일반미'가 증가하였음.
 - 현재 한국에서도 소비 감소 등으로 쌀이 과잉이 되어, 작부면적의 1% 정도이지만 생산조정이 일어나고 있으며 통일쌀은 보이지 않음. 그러나 수출 여력은 거의 없는 실정임.
- 중국, 한국과는 달리 태국은 여전히 인디카 쌀 생산국임. 따라서 수출도 인디카 계통의 쌀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최근 정부와 업계는 향미(香米)의 수출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함.
- 쌀 수급 사정의 다양성은 생산비와 가격의 다양성을 의미함. <표 3>에서 일본과 3개국의 쌀 생산비를 비교해 보면, 생산비 조사의 약속 및 비목의 취급이 나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쌀 생산비는 나라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특히 일본이 높은 것은 확실함.

<표 3> 쌀 10kg 생산비

단위: 엔

	중국		한국	태국		일본
	자포니카	인디카		건기작 쌀	우기작 쌀	
물재 등 비용	65	61	232	41	65	1,467
노동비	43	50	172	23	19	907
이자, 지대	13	13	406	17	25	571
계	121	124	810	81	109	2,945
농가판매가격	160	133	1,209	131	111	2,693

자료: 일본은 '쌀 및 맥류의 생산비', 다른 국가는 각국 정부의 통계표

주 1. 년도는 타이의 건기작 쌀은 1996년, 우기작 쌀은 1994/95년이고, 다른 3개국은 2000년임.

2. 일본은 현미, 다른 3개국은 조곡임. 한국은 정곡을 조곡으로 환산함.

3. 엔화로의 환산은 1元=14엔, 1원=0.1엔, 1바트=2.92엔으로 함.

- 일본의 수도작은 비용과 동시에 농가판매가격도 높음. 그러나 주목하여야 할 것은 4개국 가운데 농가판매가격이 생산비를 하회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라는 점임. 결국 다른 아시아의 수도작과 비교하면 일본의 수도작은 고비용·저수익의 구조적인 특징을 보이고, FTA가 일본 수도작에 주는 영향을 생각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임.

3. FTA와 쌀의 수입 문제

- 일본은 1999년 4월 쌀의 특별조치 관세화로 전환하였음. 그 결과 쌀 수입은 MA쌀과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쌀(이하 '관세수입쌀')의 두 가지가 제도적으로 병존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관세는 kg 당 341엔이어서 실제로 수입쌀은 모두 MMA쌀임.
 - MMA쌀에는 일반수입쌀과 SBS쌀이 있는데 일반수입쌀의 대부분이 미국, 호주, 중국, 태국에서 생산된 중립종이나 장립종임. 한편 SBS 쌀은 상기 4개국 외에 인도, 파키스탄 등이 더해지며, 종류는 미국,

호주, 중국은 단립종과 종립종이고, 태국, 인도, 파키스탄 등지의 쌀은 장립종임. 양적으로는 단·종립종이 압도적으로 많음.

- 쌀 생산과 수입 실태는 당연히 FTA 협상에 대한 대응에도 영향을 줌. 중국 정부는 외국무역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거기서 일본의 농산물관세는 공업 생산품보다 높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음.
 - 쌀에 대해서도 일본의 불공정한 수입규제가 일본시장에서 중국 쌀의 가격경쟁력을 약하게 한다고 기술하고, 앞으로 쌀 정책 개선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한다고 하였음.
- 한국에서는 UR에서 받아들인 특례조치가 2004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 사후대책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 때문에 발전도상국 적용이 계속될지, 폐지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음.
 - 한국은 쌀 과잉이 현재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출 여력은 없고, 물론 일본으로 수출도 없음. 동시에 농가경제의 악화에 의한 경영적자라고 하는 국내 문제를 안고 있음. 그러나 칠레와의 FTA 협상에 대한 국내의 반대가 심하지만, 대 일본 농산물 수출 확대를 기대하는 의견도 보이고 있음.
- 태국은 원래 장립종 생산국이어서 일본의 쌀 시장에서 요구하는 품질과는 다른 쌀이며, 따라서 FTA에 의한 대일본 쌀 수출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강함.
- <표 4>는 관세율이 인하될 때의 수입가격을 시산한 것임. 여기서 적용된 관세 인하율 45%, 60%는 2003년 2월 WTO의 하빈슨 의장이 모델리티 제1차 안으로 제시한 비율임. 만일 이 정도의 관세율이 인하되면 일반수입쌀은 물론, SBS쌀도 국내가격과 거의 같은 수준이나 더 하회하는 수준이 됨.

<표 4> 관세율 인하 수준에 의한 수입쌀 가격 시산

단위: 엔/10kg

	국가		현재			관세 인하율		매입가격		자주유통미 입찰가격
			수입가격	관세	계	45%	60%	45%	60%	
2002	SBS쌀	미국	915	3,410	4,325	1,876	1,364	2,791	2,279	2,693
		중국	725	3,410	4,125	1,876	1,364	2,591	2,079	
		태국	659	3,410	4,069	1,876	1,364	2,535	2,023	
	일반수입쌀	394	3,410	3,804	1,876	1,364	2,270	1,758		
2003	SBS쌀	미국	1,246	3,410	4,656	1,876	1,364	3,122	2,610	3,753
		중국	1,086	3,410	4,496	1,876	1,364	2,962	2,450	
		태국	763	3,410	4,173	1,876	1,364	2,639	2,127	
	일반수입쌀	547	3,410	3,957	1,876	1,364	2,423	1,911		

자료: 농림수산성 관계 통계

주 1. SBS쌀은 입찰된 각국의 매입가격을 매입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시산.

일반수입쌀은 낙찰된 모든 국가의 가중평균 가격임.

2. 관세 인하율은 2000년 2월 WTO 하빈손 의장이 모델리티 1안으로 제시한 것.

3. 2003년도 자주유통미 입찰가격은 1~8회의 평균임.

- 2003년산은 흉작으로 일본산 쌀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수입쌀과의 가격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있음. MMA쌀은 정곡이고, 일본 국내 쌀은 현미이므로, 이것을 고려하면 MMA쌀이 10% 정도 싼 가격이 됨. 관세율이 인하된다면 MA쌀에 관세수입쌀이 추가됨.
- 물론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생산자, 생산자단체의 비판이 강한 것은 각국이 공통적임.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에 있어서 쌀은 농산물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문제임.

4. FTA와 일본의 수도작

- 일본의 수도작은 생산비, 가격에서 보아도 아시아의 다른 생산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문제는 품질이지만, 중국, 한국에서 보듯 최근 양질미 생산으로 전환이 강해지고 있음. 반대로 일본에서는 가정식용, 외식용, 가공용 등 쌀 수요의 다양화가 진전되어 품질로는 아시아 쌀과의 시장공통화가 나타나는 상황임.

- 따라서 쌀에 대한 예외 없는 시장개방이 된다면 일본의 수도작은 과멸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음. FTA에서 자유화가 진전되면 역으로 품질 중시로 수출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 수입확대로 소규모 농가가 구축된다면 구정조정이 진척되어 수도작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담당자가 육성되어 '외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수도작 상황을 보면 이러한 의견이 기대하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음. 정부가 '쌀은 관세인하의 예외로 취급할 방침'이라고 하는 것도 이유는 거기에 있음. 물론 이것이 농산물 수출이나 후계자 육성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한 것임.
- 현재 일본의 쌀 생산은 큰 곤란에 직면해 있음. 그러나 쌀은 이제야 말로 농업 생산은 물론 국민 식량의 안정적 확보 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음. 현재 식량 자급률 향상이 과제가 되어 있고, 그것을 국내 농업 총생산의 증대에 의해 달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쌀 생산의 건전한 발전이 중요함.
- 쌀은 아시아의 농산물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것만 아니라 자급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각국의 생활과 문화의 기초가 되어 있음. 아시아의 곡물비축 시스템도 검토되어지고 있지만, FTA에서는 '국제규범의 강화'를 획일적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각국의 실태에 따라 다양한 대응을 추구하여야 할 것임.

FTA의 축산부문에 대한 영향과 앞으로 과제

가이 사토시(甲斐 論, 九州대 대학원 교수)

1. 세계 주요 FTA에서 관세철폐 예외품목이 되어 있는 많은 축산물

- 우선 세계의 주요 FTA에서 축산물이 관세철폐의 제외품목으로 되어

있는 사례를 검증하고자 함.

- 미국, 캐나다 간에서 미국은 유제품을, 캐나다도 유제품과 가금육, 계란을 제외품목으로 하고 있음. EU는 소, 돼지, 닭을, 멕시코는 소, 돼지를 재협상 중에 있음. 2002년 10월에 합의한 호주·태국 FTA에서 태국은 소, 돼지를 2020년까지 관세철폐를 연기하고 있음. 2004년 1월에 합의한 미국·호주간 FTA에서 미국은 소에 대해 18년 후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음.

2. 축산물의 높은 지역자원 이용기능과 지역노동력 고용 기능

- 각국간에 체결되고 있는 FTA에서 축산물이 관세철폐의 제외품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그 이유는 축산물이 상대 국가에 대해서 비교우위성이 없지만, 그러나 자국 농업의 중요한 부분이고, 자국의 급격한 산업 공동화가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함임.
- 각국의 축산업을 살펴보면 번식우 사양은 방목 등에 의해 지역의 대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이고, 소·돼지·브로일러의 비육업은 풍부하게 생산되는 지역곡물을 활용하는 산업임.
 - 가축·가금의 식육처리 산업은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지역 기간산업이기도 하다. 축산물과 사료의 운송업도 지역 노동자에게 많은 고용기회를 주고 있음.
- 축산은 생산·유통·가공의 후드시스템에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산업연관 효과가 크고, 그 이유로 FTA에 의한 급속한 축산업의 붕괴는 지역자원의 유희를 불러일으키고, 단기간에 지역 내 다른 산업으로 이용을 전환하는 것이 곤란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축산물을 관세철폐 제외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임.

3. 일본·멕시코 간 FTA에 있어 축산물에 대한 대원칙 합의 내용

- 일본·멕시코 간 FTA협상은 2003년 10월 동경에서 각료 수준의 절충이 있던 후 정력적으로 협상이 전개되어 2004년 3월 12일 관계각료 TV회담에서 큰 원칙을 합의하였으며, 농림수산 품목에서 약 1,200품목(농산품은 307품목)에 대해 관세의 철폐와 삭감이 약속됨.
 - 3.8만 톤의 수입실적이 있는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차액관세 제도에 의해 1kg당 393엔을 초과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관세율을 4.3%에서 2.2%로 인하하고, 수입총량은 초년도의 3.8만 톤에서 5년째가 되는 해에는 8만 톤으로 확대하도록 함.
 - 수입실적이 없는 닭고기는 1년간의 시장개척 기간(무관세, 총량 10톤)을 설정하고, 2년 이후에 저관세 수입량을 설정하여 2,500톤에서 5차년에는 8,500톤으로 확대하고, 세율은 협정발효 후 1년마다 협의하도록 함.
 - 수입실적이 없는 쇠고기는 2년간의 시장개척 기간(무관세, 매년 10톤)을 설정하고 3차년 이후 저관세 수입총량을 설정하여 3,000톤에서 5차년에는 6,000톤으로 확대하며 세율을 협정 발효 후 2년차에 협의하는 것으로 함.

4. 농업대국 멕시코의 구조개혁 지연과 무역적자

- 멕시코는 인구 약 1억 명이고, 농가인구 비율은 23%, 농업취업 인구 비율은 21%인 농업대국임.
 - 옥수수의 대 생산국으로 연간 생산량이 1,800만 톤을 넘고 있음. 밀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수백만 톤의 생산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생산이 감소하는 경향이며, 그 대신 두류, 채소류, 과실류의 생산이 착실히 성장하고 있음. 채소류의 중심품목은 토마토인데 멕시코는 토마토의 원산지임. 망고, 바나나 등의 과실류는 커피원두와 함께 주로 남부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음. 쇠고기 생산량은 최근 130~140만 톤대로 추이하고 있고, 돼지고기 및 닭고기도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우유 및 계란 생산량도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

음.

- 멕시코의 무역(2001년)을 살펴보면 총 수출액은 830억 달러, 총 수입액은 1,090억 달러로 260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음. 그 중 농산물 무역에 한정해 보면 수출 76억 달러, 수입 108억 달러로 32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음.
 - 멕시코는 농업의 구조개혁이 지체되어 농업대국이면서도 농산물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등 국가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국면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일본에 FTA를 요망하는 배경일 것임.
5. 자유무역으로 고민하는 멕시코의 축산업과 그 보상으로의 대 일본 수출 공세
- 멕시코는 1994년 미국,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NAFTA)을 발효시켰고, 그 외에도 코스타리카, 칠레, 니카라과 등 중남미 국가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음. 또 1999년 11월에는 EU와 자유무역협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2000년 7월에 발효하였음.
 - 닭고기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산 닭고기는 2003년부터 관세가 철폐되고, 잠정 세이프티가드(SG)를 거쳐 현재 정식으로 발동하고 있음. 그러나 SG는 2007년까지가 기한이고(관세율은 2003년 98.8%, 2007년 19.8%, 2008년 0%) 그 무관세 총량을 확대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2003년 10만 톤, 2007년 10만 4,060톤) 앞으로 닭고기 가격의 하락이 큰 걱정이 되고 있음.
 - 특히 미국에서 코레스테롤 치가 높다는 이유로 상품 가치가 낮은 닭의 다리 살 등 적신육의 상품가치가 오히려 멕시코가 비싸다는 점이 짙은 가격인 미국산 닭고기가 멕시코로 유입되는 요인이 됨.
 - 닭고기의 1kg 당 가격(2002년)을 보면 멕시코산이 12.7페소인 것에 대해 무관세 총량 내의 수입가격은 7.0페소(일본산의 55%)이고, 무

- 관세 총량 이외의 수입가격도 9.1페소(일본산의 72%)임. 2002년 시점 1페소는 약 13엔이어서 멕시코산 닭고기 1kg당 가격은 165.1엔이고 일본산 닭 가슴살은 208엔, 다리 살은 625엔임.
- 돼지고기 1kg 당 가격(2003년 6월)은 갈비뼈가 붙은 지육의 도매시장가격이 26.6페소(약 346엔)이고, 같은 시기 일본의 농림성 규격의 520엔에 비해 상당히 저렴함.
 - 멕시코는 NAFTA 이외에도 앞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미주대륙 34개국과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의 협상을 2005년 1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승인하고 있고, 또 EU와도 FTA를 재협의하고 있음.
 - 멕시코의 축산업은 일본 이외의 국가와의 자유무역에 의해 악영향을 강하게 받은 위험성이 있고, 그 악영향을 일본으로 축산물을 수출하는 것으로 보상받으려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음.

6. 일본·태국 간 FTA의 육계산업에 대한 영향

- 일·태간 NAFTA에 대해 사전 검토와 산·학·관 공동연구회를 거쳐 2004년 2월부터 정부간 협상이 시작됨.
- 일본·태국 간 무역균형을 보면 일본의 수출초과(2002년 수출 1.65억엔, 수입 1.31억엔)이지만, 농산물 무역은 수입초과(2002년 수출 139억엔, 수입 327억엔) 상태임.
- 일본이 태국에서 수입하는 전체에 대해 농림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이고, 유관세 수입품의 제1위가 가금육(451억엔), 제2위가 가금육의 조제품(꼬치용 고기, 303억엔)임(2002년).
- 태국이나 브라질, 중국 등지에서 저가의 가금육과 그 조제품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일본의 닭고기 자급률은 1985년 92%에서 2002년에는 65%로 하락하고,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의 목표치인 74%(2010년)를 대폭 하회하고 있음. 육계 사양육수는 1987년 7,082호에서 2003

년에는 2,839호로 급감하고 있음.

- 일본의 육계 사육은 1950년대부터 급증하여, 1987년에는 연간 7.5억수를 생산했지만 그 후 수입계육의 영향을 받아 2002년에는 5.9억수 생산으로 축소됨. 그 배경을 보면 일본의 닭고기 수입관세 인하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수입관세는 1964년 205에서 단계적으로 인하되어져 2000년에는 뼈 붙은 다리살이 8.5%, 기타는 11.9%, 조제품은 6%에 불과하였음.
 - 게다가 대폭적인 엔화 강세(1985년 1달러 당 200엔에서 1987년에는 121엔)의 영향도 있어 닭고기 수입량은 1987년 19.5만 톤에서 2002년 69.3만 톤으로 3.6배 증가함. 그 중 태국에서 수입된 비중이 2002년 35%로 최대였음.
- 앞으로 일본·태국 간 FTA에 있어 닭고기의 관세가 철폐된다면 가격차(2001년 1kg당: 태국의 냉동 뼈 없는 다리살 237엔, 냉동 뼈있는 다리살 219엔, 일본 신선 다리살 650엔, 냉동다리살 325엔)를 반영하여 더욱 수입량이 증가하고, 일본 계육산업의 공동화가 가속될 것임.
- 계육산업은 南九州와 동북지방 등의 취업기회가 적은 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지역주민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육계 사육이나 계사 청소 등에 약 1만명, 전국 약 200개소의 육계 처리가공공장과 제품의 수송에 약 2만명, 전국 약 500개소의 배합사료 공장, 원료사일로에 0.3만명, 계사나 처리장의 건설과 유지에 약 0.3만명, 닭고기의 유통과 판매에 약 1만명의 합계 약 5만명이 계육산업에 취업기회를 주고 있어 계육산업의 공동화는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함.

7. 한국·칠레 간 FTA와 한국에 있어 축산물의 수입상황

- 한국은 칠레와의 FTA를 2003년 2월에 조인하였음. 그러나 농업단체가 농산물 자유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FTA 비준

안은 2003년 7월에 국회에 제출되기는 했지만, 의결이 저지되었음. 2004년 2월에 겨우 4번째 만에 국회를 통과하여 2004년 4월 11일에 발효되었음.

- 한국·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2천 톤까지 닭고기가 무관세로 수입되게 되었음. 원래 한국에서는 닭고기 수입에 대해서는 1997년까지 관세할당량(이하 TRQ, 6,500~10,350톤)을 시행하여 TRQ 범위 내 관세율은 20%(범위외관세율 30~33%)로 해왔으나, 1998년에 TRQ를 종료하고, 수입관세를 29%에서 2003년에는 21.5%로 낮추고 있음.
 - 미국으로부터 표준 뼈 붙은 제품, 태국으로부터는 뼈를 제거한 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중국은 조류독감이 유행하기 이전까지는 한국의 주요한 닭고기 공급국이었음. 2003년 전반에는 태국이 미국을 제치고 한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급국이 되었음.
- 돼지고기 수입은 TRQ가 배제되었던 1998년에 완전히 자유화되었음. 1998년 수입관세는 32.2%였지만, 서서히 인하되어 2003년에는 26.2%가 되었음. 수입품은 캐나다, 벨기에, 덴마크, 미국, 헝가리 등지에서 들어왔고, 대부분이 냉동제품으로 한국이 좋아하는 불고기용의 냉장품은 적었음. 그러나 2003년 칠레 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12,000톤으로 2002년 2,456톤에 비해 456%로 급증했고, 벨기에에 이어 2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앞으로 칠레로부터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음.
- 국내 낙농가와 유제품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탈지분유의 총량 외세율을 176%, 총량 내 세율 20%(1,934톤) 또는 전지분유의 총량 외세율을 176%, 총량 내 세율을 40%(573톤)으로 관세율을 높이 설정하고 있지만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음. 수입국은 미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임.

8. 일본·한국 간 FTA의 한국 축산업에 대한 효과

- 일본과 한국과는 2002년 7월에서 2003년 10월까지의 산학관공동연구회를 거쳐 2003년 12월부터 정부 간 협상이 시작됨. 한일 무역수지는 일본이 대폭적인 수출초과이며, 한국 측은 FTA에 의한 대일적자의 확대와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걱정하고 있음(일본으로부터 수입 3.6조엔, 대일수출 1.9억엔).
 - 농림수산물 무역수지는 일본이 대폭적인 수입초과임(한국의 대일수출 1,810억엔, 수입 407억엔). 농수산물의 평균 관세율은 한국 쪽이 높아, 농산물 관세가 일본이 10.6%, 한국이 84.04%이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관세는 일본이 4.4%, 한국이 13.04%임.
- 한국에서는 한·일FTA가 한국 축산업에 주는 플러스 효과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 ① 과거 12년 간 한국의 돼지 사육 두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② 한편, 일본의 돼지 사육두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음. ③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이 과거 10년간에 급증하고, ④ 한국산 돼지고기가 일본 가격의 반 정도이고, ⑤ 한국에서는 사육의 다두화가 일본보다 이르게 진행되고 있어 경쟁력이 일본보다 높음. ⑥ 차액관세제도가 있지만 무관세가 되면 한국에서 수출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지적임.
- 한국의 돼지 사육두수는 1990년 452.8만두에서 2002년에는 897.4만두가 되어 배로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은 같은 기간에 1,182만두에서 961만두로 감소하고 있음. 일본의 돼지고기 생산량의 감소와 한국의 생산량 증가와 높은 자급률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FTA 체결 후 한국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출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액이 20억달러에서 34억달러로 70% 증가하고, 2000년 한국산 돼지고기의 평균가격은 1kg 당 2,391원이어서 일본산 돼지고기 가격 4,330원의 55.2%에 불과함. 그 때문에 관세가 없어진

다면 돼지고기의 수출증대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된.

- 돼지고기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치가 -1.43으로 다른 품목보다 높고 약 2,000만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9. 전염병에 의해 무역이 돌발적으로 중단될 불안정 구조를 가진 축산물 무역과 국내 생산의 중요성

- 이상과 같은 한국 측의 희망적 예측은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돼지의 질병인 구제역, 돼지 콜레라 등에 의해 현재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이 중단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하고 있음. 1999년까지 한국에서 일본으로 돼지고기가 수출되었지만, 2000년에 발생한 구제역 등의 원인에 의해 현재도 수출이 중단되어진 상태임.
- 2002년에 한국은 확진 집종을 중지하고 구제역이 정화되었음을 선언하였고, 국제수역사무국(OIE)도 인정했지만 2002년 5월에 구제역이 재발하였음. 게다가 2002년 4월에 돼지 콜레라 발생이 확인되어 대일본 수출재개는 2005년까지 중단되어져 있는 상태임. 그러나 그 동안에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음.
- 축산물 무역에서는 BSE,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가금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돌연히 수출이 중단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축산물 무역은 매우 불안정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그러한 사태에 대응하여 국내 생산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가는 것이 필요함.

10. 일본은 '세계 자유무역 도미노현상'의 종점인가?

- 멕시코는 FTA에 의해 미국으로부터 닭고기 등 축산물이 대량으로 유입될 위기감을 갖고, 한국은 칠레로부터 같은 압력을 받고 있음. 멕시코와 한국은 FTA로 인해 받는 피해 해소책의 하나로서 일본과

의 FTA를 설정하고, 일본으로 축산물을 수출함으로써 자국의 피해를 만회하려고 있는 듯이 느껴짐.

- 이러한 견해를 바꿔보면 일본은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도미노 현상의 최종점에 위치하고 있고, 세계 각지의 도미노 현상의 피해의 최종 보상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됨.

11. 도축장·식육처리장의 위생관리

- 축산물의 유통이 다른 농산물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살아있는 생물의 생명을 다루는 작업이 필요해서 도축장·가금처리장이 후드시스템 가운데 필요함. 앞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와 FTA가 체결될 것이지만, 이러한 유통시설에 있어 위생관리가 충분치 않으면 각종 세균이 만연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 사고로 번질 위험성이 있음.
- 유통시설의 위생수준 고도화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함. 그리고 위생수준을 일상적으로 높게 유지하려면 종업원의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이 불가결함. 이와 같이 축산물 유통시설의 위생관리에는 하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 일본에서는 O-157 사고 이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실시해 오고 있음. 국내에는 엄격하고, 외국에는 느슨한 위생관리가 되지 않도록 일본은 수입국으로서 축산물 수출국에 대해 위생관리를 국내 수준과 조화를 기하기 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해야 함.

12. 축산환경 보전비용의 불균형

- 대만에 구제역이 발생하기 이전 일본은 대만에서 돼지고기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던 시기였음. 당시 대만에 가보고 놀란 것은 축산환경 대책이 매우 빈약하고, 마을 한 가운데에 돼지 분뇨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음. 축산물 생산에는 분뇨의 처리가 뒤따름. 분뇨에 대한 대책을 방치한 채 환경보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 저비용을 무기로 축산물을 수출해 온 것은 문제라고 생각되었음.

- 일본에서는 2004년 11월 1일부터 '가축배설물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되어, 가축 배설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게 되었음. 그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어 비용 상승이 발생하고 있음. 수출국이 같은 수준의 환경보전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일본에서의 축산물 생산은 불리하게 됨. 수입국으로서는 축산물 수출국에 대해 공정한 무역을 요구해야 함.

12. 일본 농산물 생산과 후드시스템의 유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의 산업연관분석

- FTA 등에 의해 농산물 수입량이 증가하고, 그 결과 지역의 농산물 생산액이 감소한 경우 어떠한 영향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발생하는 것인가를 규슈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계측하고자 함. 계산한 역행렬 계수는 경쟁수입형 모델임.
- <표 1>은 어떤 이유로 규슈 농업 생산액이 10% 변동(증가 혹은 감소)한 경우 지역의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한 결과임.
 - 제1차의 직접적 영향(1차 파급)부터 검토하면, 농업 생산액의 10%, 즉 2,153억엔의 변동에 의해 식품산업에서는 170억엔, 금융·보험업에서는 87억엔, 상업에서 63억엔 등의 생산액 변동이 발생함. 이러한 제1차 직접영향의 합계액은 2,757억엔임.
 - 2차 파급액은 부동산에서 34억 엔, 상업에서 25억엔, 대 개인서비스업에서 25억엔, 식품산업에서 19억엔, 금융·보험에서 12억엔, 농업에서 6억엔 등이고, 2차 파급의 총액은 198억엔임. 결국 규슈에 있어 농업 생산액이 10% 변동한다면 그 직접 영향(제3차 이후의 영

향은 적기 때문에 무시한다)은 2,955억엔이 됨. 직접적 영향은 농업 생산액의 약 1.37배나 됨.

<표 1> 규슈에 있어 농업 생산액이 10% 변동된 경우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단위: 100만엔

	1차 파급액(A)	2차 파급액(B)	영향(A+B)
농업	215,331.3	602.4	215,933.7
식료품·담배	17,015.0	1,917.0	18,932.0
펄프·제지·종이가공품	1,860.1	89.6	1,949.8
화학제품	2,914.5	139.8	3,054.3
건축·건설보수	1,042.9	258.3	1,301.2
전력	1,643.7	640.3	2,284.0
상업	6,306.9	2,522.9	8,829.8
금융·보험	8,746.0	1,158.5	9,904.5
부동산	594.4	3,399.5	3,994.0
운수	6,230.2	1,020.9	7,251.1
통신·방송	670.3	635.8	1,306.2
교육·연구	591.8	577.3	1,169.1
의료·보건·사회보장	0.2	1,190.6	1,190.8
대 사업소서비스	5,150.7	992.3	6,143.0
대 개인서비스	85.3	2,496.2	2,554.4
기타	7,521.4	2,209.2	9,730.6
합계	275,704.9	19,823.6	292,528.4

자료: 규슈 통상산업국, '1995년 규슈지역 산업연관표' 2000년에서 작성

- 이상의 분석에서 농업에서 발생한 생산액 변동은 규슈 내의 식품산업, 상업, 금융업, 운수업,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 많은 산업으로 영향이 파급되는 것이 명확함. FTA 등에 의한 농업의 변동은 지역경제에도 파급되는 것을 이해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일본이 아시아 각국과 FTA를 체결한 경우 일본의 전략

- 특히 태국 전분의 영향

나가키 마사카즈(永木正和, 筑波대 대학원 교수)

1. WTO인가, FTA인가

- 이번 WTO 협상도 농업부문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으나, 겨우겨우 타결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확실해지고는 있음. 초점의 하나는 관세율 상한설정 안임. 일본 정부는 여기에 쌀이 포함되어 있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일본으로서는 '농업의 다각적 경영'을 입법화한 '식료자급률목표'를 방패로 하여 가급적 자유화에 저항하는 작전임. 국내적으로는 그 정책 가이드로부터 다면적 기능론, 자급률 유지·향상의 필요론 정보 발신 효과, 유전자조작이나 BSE로 촉발된 식품의 안전성론이 순풍을 타고, 시장개방론은 모습을 감추고 있음.
 - 물론 높은 국내가격과 재정지출이 허용되는 것은 누구도 생각지 않고, 농업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대부분 국민이 이해하고 있기는 함. 여기서 세계화 가운데의 국제협조 관계, 국민여론, 그리고 국내 농업에의 영향이라는 3가지 축을 가지고 WTO협상과 국내대책으로의 현실적인 정책운영이 요구됨.
- 경제활동의 세계화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음. 시대적으로 내수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일본의 자원 부존량을 생각해 보면 일본경제의 에너지는 기술이고, 세계를 리드하는 기술로 대외무역의 활로를 찾아가지 않으면 안됨. 일본 상표의 해외에서의 활로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이렇게 생각하면 공격적인 것은 공업이고, 상대적으로 열위 부문인 국내 농업부문은 '수세적'인 구도가 되지 않을 수 없음. 그러나 이 경우 중요한 것은 국내 농업부문에 발생하는 마이너스 영향을 타산업이 메워주는 '칼도아'의 보상원리, 혹은 산업연관보상원리에의 합의임.

- 일본경제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으로서 국내 농업을 개 방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농업부문이 양보하더라도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이 우선되어야 함. 그러면 일본의 식생활, 일본의 농업에의 중요성 때문에 쌀과 축산물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고 전 작물, 말하자면 가공용 원료 전작물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안됨.
- FTA는 관심국가 간에 관심품목을 놓고 하는 자유로운 협상임. 무역 이나 투자의 규율에 자유도가 높고, 취급하는 품목이나 내용에도 유 연성이 높음. FTA는 실효가 높고, 협상도 성립되기 쉬움. 이 점에서 세계가 FTA에 주목하고 있음. 일본은 FTA에의 참여가 늦었지만 싱 가포르에 이어 멕시코와도 FTA협상을 성립시켰음. 지금 태국, 필리 핀, 한국 등 아시아 각국과의 제휴를 강화하기 위해서 협상 중임.

2. 아시아와의 FTA에 의한 일본과의 농산물 협상과 그 영향

- 앞으로 아시아 각국과 전술한 두 가지 요점, ① 일본경제에 있어서는 비 농산물 수출확대에 의한 보다 실질적 효과를 얻으며, ② 농업부 문 양보가 어쩔 수 없지만 쌀 등의 중요 관심품목을 예외적으로 취 급함으로서 FTA의 체결이 진척될 것임. 그 결과 쌀 이외의 아시아 농산물을 보다 더 받아들이는 쪽으로 무역이 확대될 것임.
 - 다만,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아시아 각국의 일본에 대한 요구 내용 이 다양하다는 것임. 모두 농업국이어서 WTO협상의 체결을 기다리 지 못하고, 일본과의 신속한 협상을 추구하는 의도가 있음. 일본 정 부는 WTO협상이 곤란한 농산물 부문의 협상을 피하고 효과적인 무 역확대 효과를 얻으려 하고 있지만, 배경은 같아도 협상에서 노리는 점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FTA라면 하고 간단히 타협하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됨
- 좀 더 FTA무역의 문제점을 적시하면, 원료 농산물을 대상으로부터

제외하고, 자유화를 면했다하더라도 제품수입을 무관세로 하면 '예외 없는'이 함정이 됨. 국내산 원료시장을 잃어버리게 되어 큰 영향이 일어남. 다른 또 하나의 함정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음.

- 수출국이 수출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료 농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약간의 가공으로 제품 또는 중간재로서 수출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 FTA상대국이 저(제로)관세를 역이용해서 터널효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됨. 원산지 표시가 들어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함.
- 현실 문제로서 예를 들면, 일본은 멕시코와의 FTA에서 대폭 양보한 돼지고기 문제가 있지만, 한국도 일본과의 FTA에서 관심품목이 돼지고기임. '멕시코와는 양보하고, 한국에는 양보하지 않는다'는 통하지 않음. 또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확대는 이전부터의 수입국의 기득권을 뺏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들 나라는 기존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출가격을 낮추는 대항조치를 하거나, 혹은 일본에 대해서 관세 인하를 요구하게 될 것임. 이 경우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음.
 - 이것은 새로운 무역마찰의 불씨가 된다(사실 미국은 일본이 멕시코에 허용한 수입조건을 요구하고 있음). 불씨를 안은 채로는 장기적으로 FTA국가가 증가되는 만큼, 시장의 개방 정도를 높여 나갈 수밖에 없음.

3. 태국과의 FTA 협상의 행방 - 전분원료에 대한 영향은?

- FTA의 영향이지만 수입국(예로, 일본)이 FTA에서 특정국에 '최우선 대우'를 준다면, 분명히 그 수출국은 국내용 생산을 감소해서라도 일본으로 수출을 확대(무역 전환효과)함. 그러나 그 나라가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갖고, 이를 뒷받침할 수출여력이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일본은 다른 나라(ROW)로부터 수입을 계속하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는 수입량이 변하지 않아 가격도 낮아지지 않음(무역 창출

효과 없음).

- 그 나라의 수입관세율을 인하한 만큼 수입관세가 감소하는데, 그것이 국내대책으로 향해지지 않아 재원이 감소하게 될 뿐임. 역으로 FTA에서 차별적인 인하관세를 얻은 상대국이 경쟁력도, 수출여력도 충분하고 일본시장을 석권하려고 하고, 또한 일본의 관세율이 높으면 일본 국내의 총 수입량이 증대하고(무역창출 효과 있음) 국내가 격도 하락하게 됨. 요컨대 국내에 대한 영향은 상대국이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가에 의존함. 이러한 관점에서 엄밀한 연구가 없이는 영향을 말할 수 없음.
- 태국과의 FTA협상은 예민한 품목에 충분히 고려한 합의를 지향한다는 것을 전제로, 2004년 2월부터 정부간 협상을 시작하였음. 일본·태국 간 전체 무역균형은 일본이 수출초과이지만, 농산물 무역은 대폭의 수입초과이고, 일본의 수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농산물의 비중은 4분의 1로 큼(2002년 대 태국 무역수지는 총 3,340억 엔의 흑자, 그러나 농림수산물은 3,140억 엔의 적자).
- 그러나 농림수산물 중 가금육·가금조제품, 새우·새우조제품, 전분유도체, 설탕 등이 관세 부과 대상품목임. FTA협상에서 태국은 철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제품이 민감품목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일본에 당연히 쌀, 닭고기, 설탕, 전분 등 농산물과 수산물의 관세를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있음.
- 농업국인 태국에 있어 일본은 중요한 농산물 수출 상대국이고, 대일본 수출초과가 공업부문의 수입재원이 되고 있음. 한편 일본에 있어서도 가금육, 수산물은 대체로 태국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음. 그러나 이들 품목의 관세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 주목됨. 이미 태국의 수출능력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과연 태국에 어느 정도 수출능력이 있는가를 조사·연구해

보지 않으면 안됨.

- 이러한 가운데 수출의욕이 있고, 협상의 초점이 되는 품목은 전분임
 - 태국에 있어 카사바는 수출상품이고, 생산된 거의 전량이 수출되고 있음. 태국 카사바는 1960년대 초부터 생산이 급증하고 있음. 2000년 생산량은 1,800만 톤이었지만, 1998년을 정점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음. 국제상품으로 가격이 불안정하고 EU의 수입 감소로 인한 가격하락, 최근의 생산비 양등에 의한 수익성 저하가 원인임.
 - 주요 수출선은 유럽과 일본이고, 유럽에는 펠릿으로 수출하고 있음. 그 외에도 전분과 텍스트린(호정) 가공으로 연간 200만 톤 이상의 카사바 전분을 생산하고 있음. 특히 호정은 60% 이상이 일본 수출용임.(일본에서는 이 중 60%를 청량음료의 감미료인 異性化糖으로 쓰고 있음). 따라서 타피오카 생산이 사양화되고 있지만 일본 수출 의존은 강해지고 있음.

- 한편 일본의 전분 수입은 UR합의에 의해 관세화 품목이 되어 있어, 국내 생산분의 수요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포괄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또 전분 원료용 국내 감자, 고구마 생산에는 경제안정 정책에 의한 최저가격보증제도로 생산자에게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있음(국내 수요와 생산비를 감안해 결정하는 2002년 기준가격은 전분 원료 고구마 톤당 25,173엔, 감자가 톤당 13,804엔으로 10년 이상 거의 변화가 없음). 이러한 국내 전분원료 생산은 용도 수요에도, 가격에도 세이프티가드가 설정되어 있음.
 - 전통적으로 전분의 용도는 식용에서 공업원료까지 다양하며, 수요면에서의 중요성은 변함없음. 그러나 전분 자급률은 1965년경 50%, 1980년대에는 20%, 그리고 현재는 10%로 급강하하고 있음. 국내 가공용 고구마, 감자 생산은 국제경쟁력이 없고, 생산자에 있어서도 수익성이 낮음. 그러나 생산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산지가 북해도와 남규슈에 편재하고 있고, 아직 산지에서는 기간작목임. 특히 북해도

에서는 윤작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작목임. 그리고 가공공장 수가 적은 산지 입지형 현지산업이어서 지역경제 관련, 지역고용에도 공헌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분 가공생산은 향후에도 중요한 발작물의 하나로 존속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됨.

- 결국 태국과의 FTA는 국내 수요 사정을 고려하면 타피오카 전분은 멕시코와의 FTA에서 돼지고기 방식과 같이 관세율을 인하하고, 수입 총량을 설정하는 등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특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분명 국내 생산에 영향이 '있음'. 단 이 경우 '현행의 국내조치를 견지하는 것으로 심대한 영향은 안줄 것'으로 예상됨.
 - 맥주의 부재료인 콘스타치나 당화제품은 옥수수 전분을 사용해 왔는데 수입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타피오카 전분은 유전자조작 품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료 전환으로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도 태국에서 수입되는 타피오카 전분이 주목을 받고 있음.
 - 태국 측은 가금육 수입관세를 낮추어 부가가치를 높이려 하는 가운데 일본의 수입관련 검사, 수속의 국내화,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음. 현재 식품 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중이어서 다른 나라와의 일치성 조정문제 때문에 당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이슈임. 안전성에 민감한 일본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또 태국에 있어서도 좋은 방책은 아니라고 생각됨.

C2006-20 / 2006. 10

농업구조조정과 시장개방의 관계 분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6. 10.

발 행 2006. 10.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 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11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02-2242-7120 e-mail: dongyp@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